

## 로빈스,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연방제 유토피아를 그리다\*

이 규 상\*\*

**논문초록**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로빈스(Lionel Robbins)의 1937년 저서 『경제계획과 국제질서』(*Economic Planning and International Order*)에 주목한다. 이 책에서 로빈스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쇠신된 자유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의 골격(국제 연방제)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은 그의 비판과 제시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제계획과 국제질서』의 저술 맥락도 논의한다. 이 맥락 논의를 통해 로빈스의 사상과 그가 살던 시대(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 심화라는 부차적 목적의 달성도 꾀한다. 말미에선 로빈스의 신자유주의 비전의 특징을 짧게 다룬다.

**핵심 주제어:** 라이어널 로빈스, 신자유주의, 연방주의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2, B3, F5

투고 일자: 2022. 3. 4. 심사 및 수정 일자: 2022. 5. 23. 게재 확정 일자: 2022. 6. 10.

\* 본 논문의 미완성 초고는 한국사회경제학회 2021년 봄,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여러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주신 서한석 교수님, 유병하 박사님, 이병천 교수님, 이왕희 교수님, 전창환 교수님, 그리고 초고를 읽고 견해를 알려주신 강명구 교수님, 김영용 교수님, 김철환 교수님, 류동민 교수님, 박종현 교수님, 안현효 교수님, 이남형 교수님, 이상훈 교수님, 최정규 교수님, 홍훈 교수님, 황재홍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 두 분과 자문위원님께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kyuslee@ajou.ac.kr

## I. 시작하며

지난 20-30년의 기간에 이루어진 학술적 논의에서 사용 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개념 중에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또는 neo-liberalism)가 있다(Birch, 2017, pp. 59-60). 다른 ‘주의’들과 마찬가지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이 개념(Venugopal, 2015; Rodgers, 2018)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sup>1)</sup> 같은 기간 동안 집중적 연구가 이루어져 신자유주의 연구의 중흥기가 있었(거나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Springer et al., 2016; Cahill et al., 2018).

이 중흥기의 시작과 지속에 경제학사·사상사 연구자들이 상당한 공헌을 했는데(Birch, 2017, pp. 69-70), 그들 중 상당수가 1947년에 창립된 몽펠러린 소사이어티(Mont Pèlerin Society)에 주목했다(Burgin, 2012, 3장; Mirowski, 2013, 1-2장; Mirowski and Plehwe, 2009; Van Horn et al., 2011).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자유주의인 고전적 자유주의를 쇠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던 이들이 만든 이 단체는 아직도 건재하며,<sup>2)</sup> “신자유주의 사상 공동체(Neoliberal Thought Collective)”(Mirowski, 2013, p. 6)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단체의 창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Hartwell, 1995, 2장), 국내 경제학사·사상사 연구를 통해서도 대표적 신자유주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바 있는 이가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다(이근식, 2009).

1952년에 출간된 짧은 글에서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에 지적 전통으로서의 거의 죽어 있던 (고전적) 자유주의가 전간기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전통들”(Hayek, 1952, p. 729)로 되살아났음을 천명하고는, 그 전통들을 합쳐 “신자유주의(neo-liberalism)”(p. 731)라고 부른다.<sup>3)</sup> 신자유주의의 원천으로 세 명의 경제학사—캐난(Edwin Cannan), 미제스(Ludwig von Mises), 나이트(Frank H. Knight)—를 지목하는 하이에크는, 당시의 신자유주의가 다섯 집단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중 하나가 런던정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이후 LSE로 약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제학

1) 작은따옴표는 강조, 큰따옴표는 직접인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기로 한다.

2) <https://www.montpelerin.org/>를 참고할 수 있다.

3) 바로 앞 인용문헌과 같은 문헌의 쪽 번호 또는 부분(예를 들어, 장)을 나타낼 때는 괄호 안에 문헌의 저자와 연도는 적지 않기로 한다.

자들로 구성된 집단인데, 케난과 미체스의 영향을 받은 이들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 사상에 있어 아마도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핵심”(p. 729)으로 이미 성장했다는 게 하이에크의 판단이다.

본 논문은 하이에크에 의해, LSE 신자유주의 집단의 “진정한 중심”(p. 729)으로 지목된 로빈스(Lionel Robbins), 특히 그의 1937년 저서인 『경제계획과 국제질서』(*Economic Planning and International Order*, 이후 *EPIO*로 약칭)에 주목한다. 1937년 당시 이 책은 “자유주의’ 선언”(Opie, 1937, p. 514)을 담고 있다는 평을 받았고, 1938년에 개최된 월터 리프만 콜로퀴움(Walter Lippmann Colloquium)에선 신자유주의(라는 개념 또는 운동)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문헌 중 하나로 거론되었으며(Reinhoudt and Audier, 2018, pp. 93, 115), 1939년에는 “보편적 자유무역”(Carr, 2001[1939], p. 7)을 일반적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모든 현실을 이 유토피아적 원형으로부터의 이탈”(p. 7)로 간주하는 “자유방임 경제학(*laissez-faire* economics)에 대한 잘 알려진 방어”(p. 11)를 담고 있다고 규정되기도 했다.<sup>4)5)</sup> 또한 최근에는 *EPIO*의 9장에 “로빈스의 전간기 신자유주의 비전”(Desmarais-Tremblay, 2020, p. 1058)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제Ⅲ절에서 보게 되듯) *EPIO*에서는 로빈스 나름의,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쇄신된 자유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의 골격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의 일차적 목적은 그런 비판과 제시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EPIO* 저술의 맥락도 살펴본다. 이 맥락 논의는, 희소성을 강조하는 표준적 경제학 정의(definition)를 처음 제시(Robbins, 2019[1935]) 함으로

4) 자유방임(*laissez-faire* 또는 *laissez-faire*, *laissez-passer*)이 쉽게 논할 수 있는 간단한 개념이 아니기는 하나(Backhouse and Medema, 2008), 그것의 극단적 형태가 야경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인다—로빈스가 그런 의미로 자유방임을 사용한 예는 Robbins(1961, p. 78)에서 발견된다. 또한 야경국가에서 실행되는 ‘주의’보다 더욱 극단적인 ‘주의’가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데에도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인다. *EPIO*에는 자유방임이 등장하기는 하나(Robbins, 1937, p. 37), 정의되지도 상세히 논의되지도 않는다. 대조적으로 무정부주의에 대한 로빈스의 입장은 *EPIO*에서 확인 가능하며, 본 논문의 제Ⅲ절 3항에서 논의된다. 영국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을 주장했다는 견해를 (1950년대 초에) 강력히 비판하는 로빈스(Robbins, 1952, pp. 34-67)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달성하도록 안내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 법을 제정하는 자의 손”(p. 56)일 뿐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5) 대괄호(square bracket)는 해당 문헌이 처음 발간된 연도를 지칭하거나, 인용문 안에 보충 설명을 삽입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한다.

써 20세기 이후 지금까지도 경제학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로빈스의 사상과 그가 살던 시대(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 심화라는 부차적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로빈스의 생애나 저작이 현재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EPIO*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앞서 언급한) 맥락부터 제시하기로 한다(제Ⅱ절). 그 후에, *EPIO*의 내용을 재구성한다(제Ⅲ절). 끝 부분(제Ⅳ절)에선 *EPIO*에 담긴 로빈스의 신자유주의 비전(vision)의 특징을 짧게 논의한다.

## Ⅱ. *EPIO*의 이해를 위한 준비<sup>6)</sup>

### 1. 과학으로서의 경제학과는 구분되는 ‘정치경제’

국내에서 로빈스는 희소성을 강조하는 표준적 경제학 정의를 처음 제시한 경제학자로(만)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잘 알려진 정의는, 1판이 1932년에 출간되었으며 2판은 1935년에 출간된 그의 책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지닌 속성과 중요성』(*An Essay on the Nature &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이후 *NSES*로 약칭)에서 발견되는데, 경제학의 현실 응용은 이 책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책의 관심사는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다. 경제학자들이 수행하는 이 과학 활동에서, 경제 주체의 가치매김(valuation)은 주어진 자료의 일부를 구성하는 걸로 간주되어 의의를 갖지만, 경제학자 자신의 가치매김(또는 가치판단)은 객관적 분석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취급되어 배제의 대상이 된다.

로빈스의 책이나 논문 중 (경제학의 과학적 수행에 대한 논의로 가득찬) *NSES* 이외의 것이 국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거의 없기에, 그가 정책과 정치 현실을 멀리한 엄숙주의자였을 것으로 짐작해서는 곤란하다. *NSES*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식물학은 미학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원 설계에 대해 식물학자가 자신만의 견해를 가져선 안 되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로) ...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자신만

6) *EPIO*에 담긴 내용에 대한 관심이 *EPIO*와 관련되는 맥락에 대한 관심보다 크다면 제Ⅲ절을 먼저 읽고 제Ⅱ절을 나중에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의 견해를 경제학자라면 밝혀선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건 전혀 아니다. 정반대다. 경제학자라면 윤리적 문제에 대해 넓고 깊게 사고해야 한다. 그게 아주 바람직하다. ... 과학으로서의 경제학 외의 것에 관심을 가져선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 경제학자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방법론적 자세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다! (Robbins, 2019[1935], pp. 248-9)

1935년 5월에 *NSES* 2판 서문을 쓴(p. xx) 로빈스는, 약 한 달 후 제네바에 있는 국제학대학원(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에서 “집단 경제계획의 국제적 면모”(Howson, 2011, p. 227) 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고, 그 강연의 내용을 다듬은 것이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인) *EPIO*이다.

*EPIO* 서문에서 그는, 달성할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만 (앞의 인용문으로부터 짐작 가능하듯) 경제학자가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으로 활동 영역을 좁힐 이유는 없음을 분명히 한다. 가치판단을 담아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의 점검에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제공하는 개념과 도구를 활용하며, 그 기획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설득까지도 시도하는 작업을 (과학으로서의 경제학과 구분해) “정치경제 (Political Economy)” (Robbins, 1937, p. vii)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 하며, *EPIO*에 담긴 논의는 이 정치경제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p. vii).<sup>7)</sup> 이 점은 다음 절에서 이루어질 *EPIO*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분명해진다.

## 2. *EPIO*로 이어진 강연의 맥락

앞서 *EPIO*가 제네바에 있는 국제학대학원에서의 강연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대학원은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1927년에 창

7) 로빈스는 1980년에 행한 이일리 강연 (Ely Lecture) 에서 (경제사상사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경제 (Political Economy)” (Robbins, 1981, p. 7) 라는 용어는 “객관적 분석 그리고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응용의 혼합물” (p. 7) 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자신이 이 용어를 그런 의미로 1980년에 새삼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40년도 넘는 과거에 출간된 *EPIO*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고 지적한다(p. 8). “정치라는 건 워낙 중요해서 정치인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p. 6) 고 생각하는 로빈스는, 경제학자들에게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서의 분석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치판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 참여를 할 것을 권고한다(p. 8).

립되었으며,<sup>8)</sup> 그 창립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가 법학자이자 경제사학자 래파드(William Rappard)다.<sup>9)</sup> 1930년대 초부터 그는 로빈스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는데(Howson, 2011, pp. 200, 244), 1934년에는 미세스(Ludwig von Mises)에게 국제대학원 교수직을 제안했고 미세스는 이 제안을 즉각 받아들여 같은 해에 그곳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한다(Hülsmann, 2007, p. 684). 로빈스는 1924년부터 미세스와 학문적 교류를 시작하는데(Howson, 2011, p. 135), 1930년대 중반 경 두 사람은—실상 하이에크까지도—학문적 동지 관계에 있었다(8-9장).

로빈스의 1935년 여름 강연은 래파드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제네바의 국제대학원 교수였던) 미세스는 강연 몇 주 전에 로빈스에게, (강연의) 청중 대다수는 경제학이 아닌 국제관계학이나 역사학 연구에 관심을 가진 이들일 것이며, 국제연맹이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관리들, 제네바의 부르주아 집단 사람들, 제네바 대학의 학생과 교수들이 포함될 것인데 사회주의에 호감을 가진 이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Howson, 2011, p. 277).

이런 ‘까다로운’ 청중들 앞에서 로빈스는 어떤 강연을 했을까? 장소와 청중을 고려하건데,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 국한된 강연이 아닌, 국제관계와 관련되는 정치경제적 주장을 했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주장은 사회주의에 호감을 가진 청중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

1930년대 초·중반까지의 로빈스의 학문적, 이념적 여정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짐작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진다.

8)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이 대학원(<https://www.graduateinstitute.ch/discover-institute/history-institute>)은 전간기 신자유주의자들의 의견 교환의 장이기도 했다(김승우, 2021, p. 143).

9) 앞서 언급된 신자유주의 연구의 중흥기에 등장한 저작들에 따르면(Burgin, 2012, 2-3장; Reinhoudt and Audier, 2018, 1장; Slobodian, 2018, 2장), 래파드는 자유주의의 쇠신을 목표로 전간기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대표적 유럽인 중 한 명이었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신자유주의자들의 견해가 일률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에서 래파드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도 했다(Steiner, 2009).

### 3. 자유주의에서 (길드)사회주의로, 그리고 다시 자유주의로<sup>10)</sup>

로빈스는 1898년, 성공한 농장 경영주로서 농업 관련 정치활동에도 관심이 많았던 롤린드 리처드 로빈스(Rowland Richard Robbins)의 아들로 태어난다(Robbins, 1971a, pp.11-13). 아버지를 포함해 가문의 친지들은 강한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합스부르크 제국 내의 민족 문제를 포함한 중·동부 유럽의 복잡한 정세에 그리 밝지 못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pp.33, 35). 하지만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고, “전쟁은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결코 아니며, 국제관계가 발전할수록 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는 점”(p.33)을 자유주의는 분명히 보여준 바 있다고 믿었다. 한마디로 로빈스는 어린 시절을 자유주의적 질서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에서 보냈던 것이다(Howson, 2009, p.264).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다음 해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에 입학한 로빈스는 전쟁과 무관히 살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해 입대를 결정한다. 포병학교를 거쳐 1916년 8월 소위로 임관하고(Howson, 2011, pp.28-31) 런던 울위치(Woolwich) 왕립포병대 기지에서 교관으로 복무하다가, 1917년 11월에 프랑스에서의 실전에 투입되고, 1918년 4월에는 왼쪽 팔에 총상을 입어 귀국 조치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인 1919년 2월에 로빈스 소위는 제대한다(p.52).

왕립포병대 기지 교관으로 복무하던 기간(1916-17년)에 로빈스는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이념적 변화를 경험한다. 러시아 혁명 전후로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했고 사회주의 모임에도 참석했던 그는 제대와 동시에 길드사회주의(guild socialism) —페이비언(Fabian) 사회주의와 신디칼리즘(syndicalism)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사회주의 사조—노동운동에 투신한다(p.41).<sup>11)</sup> 하지만 그의 노동운동에 대

10) 본 논문은 로빈스를 중심으로 하는 근(近)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이는 본 논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이며, 이 근(近) 맥락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원(遠) 맥락, 즉 19세기 말에서 전간기까지의 기간에 유럽과 북미에서 자유주의가 주장되고 비판되던 맥락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은 아니다. 이 원(遠) 맥락에 대한 논의는 이미 Burgin(2012, pp.1-54), Caldwell(2004, part I), Markwell(2006, 2-5장), Slobodian(2018, 1-3장) 등에서 이루어졌기에 반복하지 않기로 한다.

11) 20세기 초반 영국에선 다양한 사회주의 사조들이 경합하고 있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 신디

한 열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1920년 여름 길드사회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p. 62), 같은 해 9월 노동운동을 중단할 결심을 하는데, 그 다음 달에 LSE에 입학하면서 노동운동과의 인연을 끊는다(pp. 65-67).

1920년 10월에서 1923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LSE에서 학부생으로 공부한 로빈스는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 판본 중 하나를 편집하기도 했던 캐난(Edwin Cannan), 페이지언 사회주의자로서 노동당에서 활동했고 재무장관을 역임하게 될 달턴(Hugh Dalton) 등에게서 경제학을 배운다. 길드사회주의에 우호적이던 좌파 정치철학자 라스키(Harold Laski)에게선 정치사상사를 배우고 이 분야를 자신의 학부 세부전공으로 택한다. 그런데 라스키의 지도로 약 일 년 동안 정치사상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로빈스는 라스키와 정치사상사에 공히 실망하고 사회주의와 더욱 멀어진다(pp. 92-3). 집단주의(collectivism)에 대해 매우 비판적 입장을 취하게 되고, 혁명적 사회주의는 “구세주 신화의 새로운 모습”(p. 96)일 뿐이라고 결론짓는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시스템이 될 수 없는 건 다른 아닌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p. 96).

1923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로빈스는 LSE를 졸업한다. 졸업 당시 그는 경제학 연구·교육을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었고, 법조계 진출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우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고(p. 110) LSE가 배출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이라는 평판을 가진 그를(p. 104) LSE는 놓아주지 않았다. 1909년에 초판이 발행된 자신의 저서 『실업: 산업의 문제』(*Unemployment: A Problem of Industry*)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던 LSE 교수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는 로빈스에게 연구조교 자리를 제안하고, 1924년 2월에 로빈스는 베버리지의 연구조교로 일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LSE 교수로 부임하는 1929년 8월까지의 5년이 조금 넘는 기간 중에 로빈스는 경제학을 평생의 업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옥스퍼드 뉴칼리지(New College Oxford)와 LSE에서의 경제학 강의와 학술적·대중적 글쓰기에 몰두한다.

그가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리고 자유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개혁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131-2; Robbins, 1971a, p. 108). 예를 들어, 로빈스는 1924년 10월 25일에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자유주의

---

칼리즘, 길드 사회주의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선 김명환(2006, 2009)을 참고할 수 있다.

를 옹호하는 짧은 글(Robbins, 1924)을 언론에 발표한다. 이 글에서 그는 자신이 사회주의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 후, 사회주의자들은 “독단적으로 형성한 사회 정의 개념”(p. 293)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전반적 국유화가 인간 행복의 총합을 증가시켜 주지는 않을 것”(p. 293)이라고 단언한다. 사회주의의 자본주의 비판은 물론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지만, 사회주의가 내놓는 경제 개혁안은 실행 불가능하며 (p. 293), 자신이 원하는 자유주의적 개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 내가 원하는 개혁의 종류는 다르다. 생겨날 문제들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가 이루어진 후 행해지는 개혁을 나는 원한다. 인간 욕구·충동으로 인한 한계를 인정하는 개혁을 원한다. 제멋대로 과거를 부수거나 이전의 제도를 분쇄하는 대신, 그것들을 지금의 필요에 맞게 개조하는 개혁을 원한다. 사회 정의에 대한 어떤 경솔하고 무모한 개념에 근거한 개혁이 아닌, 경제학과 공리(功利)의 분명한 원리에 근거한 개혁을 원한다. (p. 293)

또한 그는 “계급 이익과 무관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 유지되는 것”(p. 293)이 당시의 영국에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역설하는데, “정당 정치가 계급투쟁—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공개적 싸움—으로 변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재앙이 닥칠 것”(p. 293)이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sup>12)</sup> 20대 초반 길드사회주의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로빈스는 20대 중반에는 이미, 공리(功利)주의와 경제학을 앞세우며 개혁은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반(反)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것이다.

1929년 8월 로빈스는 LSE에 교수로 부임한다. 그로부터 *EPIO*의 토대가 되는 강연을 하는 시점(1935년 여름)까지의 약 6년 동안 LSE에서 정력적으로 아주 많은 일을 한다(Howson, 2011, pp. 166-277).<sup>13)</sup> *NSES* 1판과 2판이 모두 이 기간에 출간

12) (영국의) 자유당이 무너지지 않아야 그런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자신은 자유당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p. 293).

13) 이 기간에 로빈스는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쌓아갔을 뿐만 아니라, LSE를 경제학 연구·교육에 있어 주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그 중 하나가 LSE 대학원 세미나의 정례화였다. 이 세미나를 통해 이후의 경제이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논문·아이디어들이 발표되기도 했다(Howson, 2011, pp. 251-6). 예를 들어, 히스(John R. Hicks)와 알렌(R. G. D. Allen)의 한계대체율 개념(Hicks and Allen, 1934a, b)은 LSE 대학원 세미나에

된 것은 나를 잘 알려진 사실인데, 같은 기간에 그가 대공황으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제네바 국제학대학원에서의 강연과 *EPIO*는 그런 노력의 결과였다.

그런데 로빈스가 그런 노력을 하게 된 (보다) 직접적 동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와의 정면충돌, 그 후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실패와 좌절로부터 배운 교훈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의 자각이었다. 이제 우선 케인스와의 정면충돌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자.

#### 4. 케인스와의 정면충돌, 실패와 좌절의 경험, 그리고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금본위제에서 벗어났던 영국은 전쟁 중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1925년에 전쟁 이전의 평가(parity)로 금본위제에 복귀한다. 영국은 실업과 불황의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1929년에 다시 노동당 정부를 이끌게 된 맥도널드(Ramsay MacDonald)는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해줄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1930년 1월에 경제자문회의의(Economic Advisory Council)를 설치한 건 그런 필요 때문이었다(Howson and Winch, 1977, p. 1; Skidelsky, 2005, p. 419).

하지만 경제학자들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었던 경제자문회의를 통해서 그 무엇도 제대로 결정·추진할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낀 (경제자문회의의 위원) 케인스는 수상인 맥도널드에게 경제학자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케인스 자신의 견해가 관철된—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Skidelsky, 2005, p. 427). 이 요청은 받아들여져 1930년 7월 24일에 케인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학자 위원회(Committee of Economists)가 꾸려진다(p. 427). 경제학자 위원회는 1930년 9월 10일 1차 모임을 가졌고(p. 428), 같은 해 10월 24일에는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다(p. 435).

경제학자 위원회가 활동을 하던 시기는 케인스가 『화폐론』(*A Treatise on Money*) 집필을 (사실상) 끝내고 출간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는데,<sup>14)</sup> 위원들 대부

서 처음 논의되었고, 러너(Abba Lerner)의 요소가격균등화 정리는 1933년 겨울에 이 세미나에서 대학원생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러너의 논의는 새뮤얼슨(Paul A. Samuelson)의 논문들(Samuelson 1948, 1949)이 출간된 후 LSE에서 출간되는 *Economica*에 러너의 논문(Lerner, 1952)이 게재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케인스가 이 책에서 펼친 핵심 주장이 무언지는 알고 있었다. 그 책에서 케인스는 투자와 저축 간의 관계에 의해 생산과 고용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즉, 저축 대비 투자가 증가(감소)하면 생산과 고용은 증가(감소)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케인스는 고평가된 상태에서 금본위제로 복귀한 1925년의 결정을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존재 등으로 인한 명목임금 경직성도 바뀔 수 없는 제약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불황과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관세 부과와 공공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명목임금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관세를 통해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려 실질임금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의 이윤획득 가능성은 증가하고 저축 대비 투자가 증가해 고용과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케인스의 생각이었다(Eichengreen, 1984, p. 365). 또한 금본위제 유지를 위해 높은 이자율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부 투자가 증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는, 이른바 재무부 견해(Treasury view)와는 달리, 적자 재정에 의한 공공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Howson and Winch, 1977, p. 56).

관세 부과와 공공사업 추진을 노동당 정부에 제안하려던 케인스는 경제학자 위원회를 통해 만장일치의 보고서를 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하고자 했다. 경제학자 위원회 위원 모두가 처음부터 케인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피구(A. C. Pigou)를 비롯한 위원들 대부분은 결국 케인스에게 반기를 들지는 않았다(pp. 46-72; Skidelsky, 2005, pp. 427-36). 그런데 딱 한 명의 예외가 있었으니, 그 예외는 다름 아닌 “케인스 못지않은 강한 성격을 가진”(p. 430) 로빈스였다. 위원들 중 가장 젊었던 로빈스는 시종일관 관세 부과와 공공사업 추진에 대해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소수파 반대의견 보고서(minority report)를 혼자 독자적으로 제출하겠다는 고집을 부리기도 한다. 케인스는 분노했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하다가 결국 로빈스가 작성한 별도의 보고서를 최종 보고서의 끝부분 부록(통계) 바로 앞에 넣는데 동의한다(p. 435). 경제학자 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 완성될 수 있었다.

공공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는 로빈스 자신이 결국은 후회하게 될 주장이었다(Robbins, 1971a, p. 152). 1920년대 후반에 오스트리아 학파 경기변동이론에 매료

14) 『화폐론』은 1930년 10월 31일에 출간되었다(Keynes, 2013[1930], p. xv).

된 로빈스는 대공황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무대책의 대책’이 최상의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추운 겨울에 술 마시고 연못에 빠졌다 겨우 나와 떨고 있는 사람에게 일단 몸을 덥힐 것을 주는 대신, 연못 근처로 간 건 덤다고 느꼈기 때문이고 겨울인데도 덤다고 느낀 건 술을 먹었기 때문이라며 애초에 술을 먹지 말았어야 했다는—소비자들의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간의 대체율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업은행이 낮은 금리라는 ‘술’을 준다고 냉금 받아 마시곤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던 것과 같은 실책을 저지르지 말았어야 했다는—지적과 같이 당장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에 로빈스 스스로가 자책했던 것처럼 말이다(p. 154).<sup>15)</sup>

그런데 그는 공공사업 추진 제안에 대한 반대와는 달리, 관세 부과 제안에 대한 반대에 대해선 후회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p. 152; Skidelsky, 2005, p. 982). “전통적 경제학자들의 자유 무역에 대한 신뢰”(Howson, 2009, p. 264)를 공유하던 로빈스에게 “자유무역이라는 건 원리원칙의 문제”(p. 264)였기에, 관세 부과 제안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양심이 걸린”(Robbins, 1971a, p. 151) 문제였다. 달리 말해, “확고한 자유무역주의자 ... 로빈스가 느끼기에 [케인스의 관세 제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지금 당장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고용이 조금 증가할 것인지와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훨씬 크고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었던 것이다”(Harrod, 1951, p. 427).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케인스는 『평화의 경제적 귀결』(*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에서, 자유무역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조약이 맺어져야 하며(Cammarosano, 2014, p. 63-64), 패전국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방식으로는 평화가 유지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책의 성공으로 케인스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고, 로빈스의 마음에도 “영웅”(Howson, 2011, p. 1072)으로 자리 잡았다. 20대의 로빈스는 “케인스가 발휘하는 정신적 리더십이라면 따를”(Howson, 2009, p. 258) 용의가 있었던 것이다. 경제학자 위원회가 생기기 7년 전인 1923년에 케인스는 유럽에서 평화가 보장되기 위해선 통상정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할

15) 불황 시의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이 변했다는 것을 로빈스는 1940년대 후반에 명시적으로 밝혔다(Robbins, 1947, pp. 67-8). 이 입장 변화는 로빈스에겐 매우 뼈아픈 것이었다. 어느 정도나 뼈아픈 것이었을까? 이전의 자신의 입장에서 대공황에 대해 써내려갔던 책(Robbins, 1934)이 아예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워지기를 바랄 정도로 뼈아픈 것이었다(Robbins, 1971a, p. 154).

필요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는 정도였고, 이는 로빈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Robbins, 1971a, p.194) :

우린 아주 넓게 해석된 자유무역을 고수해야 한다.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상황 이라면 언제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며 타협 불가한 신조(dogma)로 자유무역을 고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자유무역을 하지만 다른 나라는 자유무역을 하지 않아 호혜적 관계가 확립되지 않는 경우라 해도 자유무역을 고수해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을 포기하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해도 자유무역을 고수해야 한다. 단지 경제적 이득의 신조로서가 아니라 국제도덕의 원리로서 자유무역을 고수해야 한다. (Keynes, 2013[1923], p. 451)

자유주의적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사회주의로의 이념적 격변을 경험했고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왔으며, 공포스런 전쟁의 기억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전간기를 살고 있던 로빈스에게, 케인스가 “평화를 위해 지켜야 할 세 가지 신조”(p. 452) 중 하나라고 강조하던 자유무역에 기초한 “국제자유주의(international liberalism)”(Robbins, 1971a, p. 194)는 양보할 수 없는 소신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sup>16)</sup> 하지만 마치 “일관성은 상상력 없는 이들의 마지막 도피처”(Wilde, 1969[1885], p. 18)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려는 듯 케인스는, 경제학자 위원회에서 관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로빈스는 그런 케인스에게서 영웅의 배신이자 변절(Howson, 2009, p. 257)을 느낀다.

로빈스가 경제학자 위원회에 합류한 것은 LSE에 교수로 부임한지 약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고, 당시 영국의 경제학 교수들 중 가장 젊었던 로빈스(Robbins, 1971a, p. 150)가 견해차로 인해 케인스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에 초연할 수는 없었다. 자유주의 성향을 공유하던 로빈스의 동료들은 그 갈등에 대해 알게 된다. 불황을 겪고 있던 영국에서의 보호주의 득세를 우려하던 그들과 로빈스는 경제학자 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 바로 그날(1930년 10월 24일) 관세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데,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한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학자 위원회(Committee of Economists under the Chairmanship of Sir William Beveridge)”(Beveridge, 1931, p. i) (라는 비공식 단체)가 (베버리지 자

16) 1920년대 중반까지도 케인스는 철저한 자유무역주의자였다(Cammarosano, 2014, 4장).

신의 제안으로) 구성된다(Howson, 2009, p.193).<sup>17)</sup>

앞서 설명되었듯이, 케인스의 경제학자 위원회는 경제자문회의의 하부에 존재하는 엘리트 경제학자들로 이루어진 임시 자문기구였다. 따라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내부 논의와 (그 결과 작성된) 보고서가 여론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학문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케인스이지만 임시 자문기구 보고서를 통해—그것도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로빈스를 포함한) 베버리지의 경제학자 위원회 위원들은 케인스의 입장 변화가 반자유주의 확산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할 필요는 없었다. 1931년 2월까지의 말이다.

1931년 3월 7일 케인스(Keynes, 2013[1931])는, 한 해 전 케인스의 경제학자 위원회에서의 로빈스의 반대 같은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듯, 영국의 불황 문제 해결을 위해선 관세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자유무역에 기초한 평화를 강조하며 유명인사가 된 케인스의 이 글은 “스스로도 자유무역주의자라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던 [상징적 인물의] 신념의 변화로 [간주되어] 센세이션을 일으켰고”(p. 231),<sup>18)</sup> 상당한 영향력도 발휘했다(Skidelsky, 2005, p. 442; Trentmann, 2008, p. 338).

1920년대를 마감하면서 대공황은 시작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관세장벽 높이기와 외환통제 강화와 같은 보호주의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이런 흐름(Eichengreen, 1992, 9-11장; Heffernan and Thorpe, 2018; Irwin, 2012; Polanyi, 2001[1944], 2장; Slobodian, 2018, 1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베버리지의 경제학자 위원회 위원들은, 자유무역에 대한 케인스의 입장 변화를 만천하에 알리는 이 글이 여론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즉각 대응에 나선다.<sup>19)</sup> 예를 들어, 그들 중 5명은 케인스의 글 발표 후 일주

17) 이후에선 이 경제학자 위원회는 ‘베버리지의 경제학자 위원회’로, (앞서 논의된) 케인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학자 위원회는 ‘케인스의 경제학자 위원회’로 칭하기로 한다.

18) 케인스 선집(Collected Writings)을 편집한 모그리지(Donald Moggridge)의 판단이며, Keynes(2013, p. 489)에 그가 삽입한 짧은 설명도 참고할 수 있다.

19) 케인스는 1931년 3월 7일에 발표된 글보다 더 대중적인 글을 3월 13일에 발표한다. “평생에 걸친 자유무역주의자들에게 보내는 청원”(Keynes, 2013, p. 489)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글에서 케인스는 “평생 자유무역에 대한 신념을 지켜온 이라고 해도” 당시의 영국 경제가 처한 “예

일 내에 케인스의 글이 실렸던 *The New Statesman and Nation*에 케인스의 관세 제안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실는다(Keynes, 2013, p. 492). 그 논평들 중 하나—3월 14일에 실린 논평—에서 로빈스는 케인스의 제안이 담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20) “베르사유 조약의 도덕적 토대를 박살낸 그가 이제 자신의 엄청난 재능을 동원해 경제 민족주의의 비열하고도 옹졸한 책략을 변호하고 있다는 건 커다란 비극”(Robbins, 1931, p. 100)이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21)

자신의 관세 제안에 대한 “맹렬한 공격”(Markwell, 2006, p. 156)에 케인스가 침묵을 지킨 것은 결코 아니었다. 3월 16일의 첫 대응(Keynes, 2013, pp. 493-7)에 이은 3월 20일의 대응에서 그는, 실업이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보통의 상황에선 고용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이유로 관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영국 경제가 당시에 처한 위기를 가볍게 봐선 결코 안 되며, “타협을 모르는 자유무역주의자들이 ... 관세가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별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p. 507) 라고 맞받아친다. 논쟁의 불꽃이 잦아들지 않자 케인스는

외적 위급상황에 사용할 방안을 제안하는 말을 거절하려고만 들지 말고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pp. 491-2)고 한다.

20) 로빈스가 지적한 문제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 관세가 정부 세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케인스의 논의는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Robbins, 1931, p. 99); (b) 그의 제안대로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되는 중간재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산업의 비용 상황이 나빠질 것인데, 그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정부가 취하면 수입되는 중간재를 더 많이 사용할 인센티브가 증가하는 딜레마가 발생할 것이고(p. 99); (c) 관세는 국내 산업에서의 고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추가적 수입(import)과 외국에 대한 신용 공여를 위한 여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케인스의 주장은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갖기도 하겠다는 식의 “공상의 세계의 경제학(economics of Cloud-cuckoo-land)”(p. 99) 논리에 불과하며; (d) 관세를 통해서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이 부양되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타격을 입는 결과가 발생할 뿐이고(p. 99); (e) 물가수준이 1929년 수준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때 관세를 철폐하면 된다는 케인스의 주장은 관세에 존재하는 “키지려는 내재적 경향성”(p. 99)을 무시한 것이고, 영국 정치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자유무역과의 이별”(p. 99)을 고하는 것이 될 것이며; (f)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관세가 아닌, 임금 조정과 효율성 제고에서 찾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 상식을 케인스는 따르지 않고 있으며(p. 100); (g) 케인스의 관세 제안은 그 자신이 얼마 전까지도 하던 주장, 즉 보호주의 정책으로는 실업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과도 상충된다(p. 100).

21) 같은 글에서 로빈스는 케인스가 “관세라는 안전한 피난 장소에 몸을 숨기고”—원문은 “Secure in his tariff funk-hole”임—(Robbins, 1931, p. 100) 있다는 표현을 쓴다. 여기서의 ‘funk-hole’이라는 표현은 병역 면제의 핑계가 되는 직무를 지칭하는 데도 사용되는데, 1916년에 케인스가 밝힌 양심적 병역 거부 의사 표현(Moggridge, 1976, pp. 17-19)을 비꼬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O’Brien, 1988b, p. 15).

3월 말에서 4월에 걸쳐 세 번에 나누어, 당시까지 제기된 비판에 대해 답한다 (pp. 498-505).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빈스가 3월 14일의 비판을 통해 격양된 감정을 드러냈듯이, (4월에 들어서는) 거리낌 없이 속내를 드러내기도 한다.<sup>22)</sup>

베버리지의 경제학자 위원회 위원들이 케인스의 반응에 만족했거나 설복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언론을 통한 비판에 더해) 자신들의 비판을 하나의 책에 담아내려는 시도를 한다. 그들의 공동작업의 결과인 『관세: 옹호에 대한 점검』(*Tariffs: The Case Examined*, 이후 *TCE*로 약칭) 1판은 1931년 10월에 출간된다(Beveridge, 1932, p. iv). 그런데 이 출간 시점은 물론 그 자체였다. 왜냐하면 1931년 9월에 영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금본위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케인스가 제시했던 관세 제안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즉시 자신의 제안을 철회했기 때문이다(Eichengreen, 1984, p. 367; Cammarosano, 2014, pp. 113-4). 과열되었던 논쟁은 식어버렸고, 이후 영국 무역수지의 개선을 반영하는 듯 케인스는 자유무역 옹호로 입장을 선회하는 듯했다(Keynes, 2013[1933a]; Cammarosano, 2014, p. 116).

하지만 1933년 6월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회의(World Economic Conference)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직된 국제본위체제를 되살리기 위한 국제협력에 반대하는 것을 목격한 후 케인스는 자유무역 옹호의 입장을 완전히 버리고, 로빈스의 *EPIO*가 출간되는 1937년까지 (그리고 이후 계속) 보호무역을 지지한다(pp. 116-7, 9장). 케인스가 국제자유주의를 완전히 버린 것은 1933년 7월에 발표된 “민족국가

22) 4월 4일의 글에서 케인스는 비타협적인 자유무역주의자들에게 “전혀 머리를 쓰지 않고”(Keynes, 2013, p. 501) 이전의 익숙한 주장들을 반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하나, “맑은 정신으로 사안 전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달라”(p. 501)고 부탁한다. 4월 11일의 글에선, 자신의 관세 제안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현재[당시의 영국] 상황 분석”에 자유무역주의자들이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한 불만을 표출한다: “이런 무관심은 자유무역이라는 신학을 논란거리로 만든 것에 대한 강한 분노와 혐오로 인한 것인가? 경제학이 기묘한 것이거나 기묘한 상황에 있기에 그런 것인가?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자유무역 근본주의자들은 새롭게 사고를 전개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나는 그들의 강요로 새롭지도 않은 케케묵은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금 논의를 해야 했고... 그들은 나를 익숙한 길을 따라 질질 끌고 다녔다. 그런데 여러 시도를 통해 내가 발견한 적이 있듯이, 그런 길을 따라 가면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다. 불꽃이 필력은 초를 들고 지하묘지에서 오랫동안 헤매게 될 뿐이다”(p. 505). 케인스 특유의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Skidelsky (2005, pp. 469-71)를 참고할 수 있다.

의 자급자족”(Keynes, 2013[1933b])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거기서 케인스는 자신이 “도덕법(moral law)”(p. 233)의 일부로 간주하던 (자유무역에 기초한) 국제 자유주의를 버릴 때가 되었다고 선언한다.<sup>23)</sup>

앞서 언급했듯이, 영국의 금본위제 포기 직후 케인스는 자신의 관세 제안을 철회했고 경제학자들 간의 논쟁은 식어버렸다. 하지만 관세가 정치인들의 레이더마에서도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보수당이 (금본위제 포기 이전에 제시된) 케인스의 관세 옹호 주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여(Skidelsky, 2005, p. 442; Trentmann, 2008, p. 343), 1932년 2월에는 경쟁적 관세장벽 쌓기에 영국도 동참하는 일이 생기고 만다(Eichengreen, 1984, p. 367; Irwin, 1996, pp. 197-8). 관세라는 것이 일단 생겨나면 나중에 그것을 없애는 것은 매우 힘들어 국제자유주의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로빈스는 이런 상황 전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sup>24)</sup> 그런데 그 다음 해 6월에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자유주의에 반하는 입장을 런던에서 발표하고, 또 그 한 달 후에는 민족국가의 자급자족을 옹호하며 국제자유주의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케인스의 글이 발표된 것이니 로빈스의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갔을 것이다.

*TCE* 1판의 출간 시점(1931년 10월)이 불운했다는 지적이 앞서 이루어졌는데, 과연 그런 불운에도 불구하고 *TCE*는 반자유주의의 파도를 어느 정도라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을까? 분명한 것은 이 책 1판이 대중적 무관심으로 출판사에 재정적 문제를 초래할 정도의 상업적 실패로 끝났다는 점이다(Trentmann, 2008, pp. 339, 413). 마치 출간 시점에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듯, (관세장벽이 세워지고 몇 달이 흐른) 1932년 6월에 베버리지의 경제학자 위원회는 2판도 내놓지만

23) 국제자유주의와의 이별이 필요한 이유로 케인스는 다음을 제시한다: (a)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자본 이동 자유의 부정적 측면이 너무 커져 금융이 국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차라리 나은 상태가 되었고(Keynes, 2013[1933b], p. 236); (b) 민족국가들이 비교우위를 (확실히) 나누어 갖던 시대가 끝나 자유무역의 편익보다 비용이 커졌으며(pp. 237-8); (c) (주택이나 돌봄 서비스와 같이) 국제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의 중요성이 높아져(p. 238) 민족국가의 자급자족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호사”(p. 238)가 되었고; (d) 국제자유주의를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어주던 19세기와 같은 상황이 다시 도래할 가능성은 없어졌기에 영국에서는 “영국이 원하는 실험”(p. 241)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실험에 있어선 다른 민족국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변화로부터 생길 수 있는 영향력은 차단되어야 마땅하다(p. 241).

24) 로빈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각주 20번의 (e)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빈스는 거의 40년 후까지도 이런 경향성의 존재를 믿는다(Robbins, 1971a, p. 155).

(Beveridge, 1932, p. iv),<sup>25)</sup> 자유무역과 국제자유주의 쇠락의 추세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를 못한다(Harris, 1977, p. 318; Trentmann, 2008, pp. 341-8). 상업적 실패가 책 내용의 부실과 등치될 수는 없으므로, TCE의 실패는 단지 대중서가 아닌 전문서적의 상업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지 모른다는 추측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TCE는 전문 경제학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한 책이었다.<sup>26) 27)</sup>

한 예로 TCE는,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교역조건 개선에 근거한 관세 옹호론(이후 T-관세옹호론으로 약칭)을 다루지 않으며(Beveridge, 1932, p. 14), 일방적(unilateral) 자유무역 비판론(이후 T-자유무역비판론으로 약칭)에 대한 세련된 내용도 하지 못한다(9장).<sup>28)</sup> T-관세옹호론이란 국제무역에 있어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수입하는 측에

25) 금본위제 포기로 인해 그 이전에 이루어진 케인스의 관세 제안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는 분석이 담긴 새로운 장(Beveridge, 1932, 18장; Eichengreen, 1990, p. 194)이 추가된 것 이외에 2판은 1판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Beveridge, 1932, p. v).

26) 케인스의 관세 제안 글이 발표되고 열흘 남짓 지난 시점(1931년3월 19일)에 베버리지는 TCE 내용 일부의 교정쇄(proofs)를 케인스에게 보낸다(Keynes, 2013, p. 513). 케인스는 3월 23일에 베버리지에게 쓴 편지에서 그 교정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케인스에 따르면, (a) 거기 담긴 대부분의 내용은 관세와 관련되는 문제를 전혀 모르는 이들을 위한 기초적인 것들이라 “성숙한 논의”(p. 514)와는 거리가 멀고, (b) 높은 수준의 미묘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는 설명 없는 단언이 너무 많아 그 “타당성에 대해선 나 자신만의 견해를 가질”(p. 514) 수밖에 없다고 혹평한다. 구체적으로 케인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언일 뿐인 것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a) 수출의 감소가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인과관계 설명의 부재(p. 513); (b) 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정책은 수출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므로 그런 정책에 대해선 걱정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정책이 효과를 내는 메커니즘이 제시되어야 하나,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의 부재(pp. 513-4); (c) 무역수지 결정에 대한 설명의 부재(p. 514); (d) 자원의 최적배분이 화폐임금의 비경직성에 얼마만큼이나 의존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의 부재(p. 514).

27) 1판 출간 다음 해에 (케인스가 편집을 하던) *Economic Journal*에 실린 서평(Wootton, 1932)에서도 TCE는 좋은 평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아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고(p. 66), 이분법적 사고가 지속되어 관세의 어두운 측면만을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논하고 있는 걸로 보여(p. 65) “관세라는 이름 그 자체에 대한 확고한 적대감”(p. 66)을 가지고 집필된 책으로 받아들일 독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서평자의 판단이었다. 물론 TCE는 국제자유주의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던 서평자(Haberler, 1932)로부터는 긍정적 평을 받는다.

28) 이런 약칭을 쓰는 이유는 이 관세옹호론과 자유무역비판론이 모두 영국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던 토렌스(Robert Torrens)에 의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처음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다(Irwin, 1996, 7장).

(수요)독점력이 있는 경우—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부과를 통해 교역조건 (terms of trade) 개선과 순이득(net gain)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T-자유무역비판론이란 일방적(unilateral) 자유무역 즉, 상호성(reciprocity)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유무역 고수는 자국의 손손실을 담보로 교역상대국이 순이득을 누리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자유무역은 교역상대국도 자유무역에서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실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T-관세옹호론이 지적하는 순이득을 한 국가가 (단기적으로) 누리는 것이 가능하려면, 그 국가의 관세 부과에 대해 다른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유지해줘야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그런 상황이 계속되리라 생각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탄력성과 관련되는 특수한 조건이 성립해야 하므로 소규모 개방경제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주장일 수 있다. 그런데 비교우위의 논리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듯, 단기에 한해서는 T-관세옹호론에 논리적 허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sup>29)</sup>

특정 시점에 특수한 상황에 처한 특정 국가에서 T-관세옹호론을 근거로 자유무역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sup>30)</sup> (논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아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리고 (대공황 시기처럼)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자유무역의 고수보다는 그로부터의 이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삼시간에 모든 국가가 보호무역을 하게 되는 일—또는 보호무역이 삼시간에 국제적으로 번지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선 T-자유무역비판론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게 보호무역이 지속될 개연성이 높지, 일방적인 자유무역 복귀가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져 파레토 최적 상태로 돌아갈 개연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T-관세옹호론과 T-자유무역비판론은 별도의 것이 아닌, 하나의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 있다.

1930년대 초반과 같이 영국 경제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던 시점에 관세 옹호론

29) 관련 논의는 Krugman, Obstfeld and Melitz(2018, pp.278-279, 308-310), Humphrey (1987), Broda, Limão and Weinstein(2008), Irwin(1991, pp.204-7)에서 찾을 수 있다.

30) 케인스의 관세 제안이 T-관세옹호론이 아니었다 해도, (a) 당시의 영국 경제가 소규모 개방 경제는 아니었고, (b) 단기적 목적 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c) 후에 로빈스(Robbins, 1971a, p.155)도 인정했듯이 케인스는 과도하지 않은 낮은 세율을 제안한 것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금본위제를 포기한 후의 영국에서 누군가가 T-관세옹호론에 근거한 관세 제안을 했다면 그 제안을 단순히 잠재울 논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을 걸로 보인다.

에 대한 포괄적 비판으로 기획된 *TCE*와 같은 책에서 T-관세옹호론과 T-자유무역 비판론이 깔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점만 봐도, *TCE*가 경제학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든 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참 후에 로빈스는 *TCE*가 “통속적이고 약점 많은 자유무역 옹호론을 담고 있어 [지적으로] 까다로운 이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Robbins, 1971a, p. 158) 책이었다는 견해를 숨기지 않는다.<sup>31)</sup>

로빈스는, 케인스의 “민족국가의 자금자족”이 발표된 1933년 7월 경—또는 *TCE* 2권이 출간된 1932년 6월에서 제네바 국제학대학원에서의 강연을 행한 1935년 여름 사이의 특정 시점—에 *TCE*에서 시도된 “무역정책에 대한 고전적 분석 반복하기”(Eichengreen, 1990, p. 194) 정도로는 국제자유주의에 대한 옹호가 불가능함을 인지한다. 1930년대 초반에 겪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 로빈스는 자유무역에 기초한 국제자유주의라는 양보할 수 없는 신념에 대한 전통적 방식의 옹호가 “혁명적인 1930년대”(Polanyi, 2001[1944], p. 21)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이런 현실 인식을 토대로 그는 국제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옹호 방법 개발을 꾀하게 되고, 곧 “[이] 문제에 완전히 새롭게 접근하기로 결심”(Robbins, 1971a, p. 158)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효율성에 대한 강조를 고수한 상태에서) 민족국가 관점에서의 이익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모든 논의를 구성한 후 국제적·세계주의적 관점에서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 자명한 것인 듯 남겨두는 전통적 자유주의 옹호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정반대로 국제적·세계주의적 관점에서의 이익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그 이익을 가능한 크게 하려면 해야 할 일과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를 제시·설득하는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p. 159).

이 새로운 방법을 따르는 경우, (a) 민족국가 수준의 단기 이익이 핵심 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막은 상태(T-관세옹호론이 봉쇄된 상태)에서 자유무역이 국제적·세계주의적 관점에서의 파레토 최적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게 되며, (b) 그런 파레토 최적 상태 실현을 보장해줄 국제적·세계주의적 관점에서의 방법(T-자유무역비판론에서 지적하는 상호성 확보를 위한 방법) 찾기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31) 바로 이 문제로 인해 LSE와의 관계가 느슨하던 로버트슨(Dennis Robertson)은 *TCE*의 서문에 자신의 이름이 공저자로 들어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Robbins, 1971a, p. 158; Howson, 2011, p. 204). *TCE*는 베버리지가 관여했던 일 중 “가장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중 하나”(Harris, 1977, p. 318)라는 평을 받는다.

수 있으므로, 32) 33) *TCE*가 담고 있는 약점 중 (적어도) 일부는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 로빈스는 착안한 것이다(p. 159). 34)

이제 *EPIO*의 이해를 위한 준비는 끝났다. 로빈스가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에 따른 국제자유주의 옹호, 즉 국제적·세계주의적 관점에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개혁의 큰그림 제시가 *EPIO*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EPIO*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 III. *EPIO*의 재구성

서문과 도입부(1장)로 시작하는 *EPIO*는, 각각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 
- 32) 앞서 인용된 케인스의 1923년의 주장에 담긴 내용 중, “우리는 자유무역을 하지만 다른 나라는 자유무역을 하지 않아 호혜적 관계가 확립되지 않는 경우라 해도 자유무역을 고수해야 [한다]”(Keynes, 2013[1923], p. 451)는 주장은 T-자유무역비판론이, 그리고 “자유무역을 포기하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해도 자유무역을 고수해야 한다”(p. 451)는 주장은 T-관세옹호론이 각각 용납하지 않는 주장이다. 따라서 1923년에 케인스는 규범과 도덕에 의지해 T-자유무역비판론과 T-관세옹호론을 무시할 것을 호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 로빈스는 호혜적 관계 확립이나 단기적 이득과 무관히 자유무역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 만들기, 즉 T-자유무역비판론과 T-관세옹호론이 애초에 적용될 수 없는 세상의 실현에 필요한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game) 찾기—메커니즘 설계(mechanism design)—로 관심을 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다음 절의 재구성을 통해 더욱 분명해진다.
- 33) T-관세옹호론과 T-자유무역비판론에 담긴 주장이 로빈스의 새로운 접근법 탐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는 점은 다음 절에서 재구성될 *EPIO*의 내용뿐만 아니라, 재구성에서 명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을 부분(Robbins, 1937, pp. 314-6)과 Robbins(1954, 6-7장; 1971b, p. 30)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각주 28에서 이 옹호론과 비판론이 공히 토렌스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토렌스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최초로 수행했으며 토렌스에 대한 최고의 연구서로 인정받는 책(Robbins, 1958)을 출간한 학자가 바로 로빈스다. 다음 절에서 재구성될 *EPIO*의 내용으로 보아 로빈스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급소를 토렌스가 정확히 짚었다고 판단했던 걸로 보인다. 20세기의 대표적 경제사상사 연구자 중 한 명이기도 했던 로빈스는 국제자유주의에 대한 핵심 비판을 (토렌스에게서 배운 것은 아니나) 인정하고 소화한 후 초기 신자유주의의 국제자유주의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논리와 기획을 고안하는 데 활용했고, 더 나아가 그 핵심 비판의 역사적 기원에 존재하는 토렌스를 (후에)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걸로 보인다.
- 34) 로빈스는 이런 국제적·세계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a) 문명세계에 사는 이들이 공유하는 “연대(solidarity)”(Robbins, 1971a, p. 159) 의식에 잘 부합하는 것이며, (b) (역시 그들이 공유하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부정부적 상태 지속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기에 대중적 호소력도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p. 159).

부—1부는 2-4장, 2부는 5-7장, 3부는 8-10장—를 몸통으로 하며, 최종 논의를 담고 있는 11장으로 끝을 맺는다. *EPIO*에서 가장 중요한 부는 3부이며, 3부의 핵심은 9장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EPIO*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대신, 사회·경제 시스템 건설과 유지를 위한 (a) 계획의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메커니즘, (b) 해당 계획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범위, 그리고 (c) 그런 계획에 있어 요구되는 강제력의 속성과 그 강제력 실현을 위한 권위체의 형태를 중심으로 *EPIO*를 재구성한다. 이하에선 우선 재구성의 개요를 간략히 제시하고, 이어 재구성에 들어간다.

#### - 재구성의 개요

- (a) 계획의 목적과 필요한 메커니즘: *EPIO*에선 시스템 차원의 포괄적 논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로빈스가 사회·경제 시스템을 개념화하는 방식(*EPIO* 8장과 9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통해, 로빈스가 사회·경제 시스템 건설과 유지를 위한 계획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하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메커니즘은 무엇이라고 주장하는지가 잘 드러난다.
- (b) 계획의 영역·범위: 목적 설정 후엔, 그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이 어떤 영역·범위에 걸쳐 건설되고 유지되어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로빈스는 (하나의 민족국가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영역·범위가 아닌) 전 세계를 해당 영역·범위로 설정한다(*EPIO* 1장과 3부)—로빈스의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또는 초기 신자유주의의 국제주의. 로빈스는 그런 포괄적인 계획이 달성할 수 있는 바를 기준으로 하여, 보다 좁은 영역·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들을 비판한다(*EPIO* 1부와 2부).
- (c) 계획에서 요구되는 강제력의 속성과 그 강제력 실현을 위해 필요한 권위체의 골격: 설정된 목표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건설과 유지를 위한) 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면 적절한 속성의 강제력 발휘가 필요하다. 로빈스는 부적절한 속성의 강제력이 발휘된 계획을 비판한다(*EPIO* 8장). 이어서 적절한 속성의 강제력은 무엇인지 논하고, 그런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위체의 골격을 그린다(*EPIO* 9장). 강제력 발휘에 있어서도 분

업이 필요하므로 이 분업과 관련되는 문제들도 짧게 다룬다(*EPIO* 9장과 10장).<sup>35)</sup>

1. 로빈스의 (지극히 경제학자다운) 사회·경제 시스템 개념화에서 발견되는 계획의 목적과 필수 메커니즘: 소비자주권 그리고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

소비자와 생산자를 주된 등장인물로 하는 로빈스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제약에 직면하는데, 이 제약은 시스템 차원에서 작동하는 제약인 동시에 소비자와 생산자 개개인이 직면하는 제약이기도 하다. 각 소비자와 생산자는 이 제약 하에서 합목적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 상정되는데, 그런 합목적적 선택을 위해선 계획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수많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계획들이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시스템 차원에서의) 성공적 결과로도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으려면 조정, 즉 “[개인적 계획이 아닌] 사회적 계획”(Robbins, 1937, p.4)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위체가 필요하다.<sup>36)</sup> 물론 어떤 성격의 강제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

이 이견에 대해서는 나중에(제Ⅲ절 3항) 다루기로 하고 우선 사회적 계획을 통해 무엇의 달성을 꾀할 것인지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이 문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중 누구를 사회·경제 시스템의 주인공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로빈스는 주저하지 않고 소비자를 주인공으로 삼는다. 경제학에서 이루어져 온 생산 없는 교환과 소비에 대한 논의—교환경제(exchange economy) 논의—에 대해서도 잘 알

35) (c)에 이은 (d)에는 ‘계획의 영역·범위 선택에 대한 방어’라는 제목 하에 아래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내용은 전체 논의에 대한 정리의 성격을 띠므로 본문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대신 (c)에 해당하는 부분 말미에 짧게 다루기로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세계를 계획의 영역·범위로 삼아야 한다는 로빈스의 견해와 상반되는 견해(예를 들어, 민족국가의 자급자족을 옹호하는 케인스의 견해)를 비판하고,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위체를 세계 차원에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전체 논의가 종결된다(*EPIO* 11장).

36) 1930년대와 1940년대 초반에 사회적 ‘계획’의 제시가 영국의 정책 논의의 장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Ritschel(1997, 1장)에서 확인되며, Maas(2014, p.74)에 재수록된 사진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로빈스는 민족국가 수준이 아닌 세계 수준에서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이 가능함을 보이려 한 것이다. 자유주의와 계획이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로빈스의 견해와 관련해서 각주 45를 참고할 수 있다.

고 있던 로빈스(Robbins, 2019[1935], pp. 28-35)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평가에 있어 최종 잣대는 (집단으로서의 전체) 소비자를 이롭게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sup>37)</sup>

자유주의 전통을 이어받으려 하는 로빈스는 소비자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는 존재로 설정한다. 따라서 로빈스의 사회·경제 시스템에선 소비자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가 생겨난다. 남이 대신해주는 선택이 소비자 자신에게 더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주는 일은 없다. 누군가가 소비자에게 ‘당신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은 당신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을 한다면 이건 거짓말이다. 이러한 반(反)온정주의(anti-paternalism)를 받아들이므로 로빈스의 사회·경제 시스템에선 생산을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맞추는 사회적 계획만이 용인된다(Robbins, 1937, pp. 191-2).<sup>38)</sup>

그렇다면 그런 사회적 계획의 실행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로빈스에 의하면 두 가지 메커니즘, 즉 (a) 소비자들의 욕구를 포착하는 메커니즘과 (b) 포착된 소비자 욕구가 가능한 잘 충족되도록 생산을 조정해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p. 192).

만일 사회적 계획이 소규모 사회·경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면 공감(sympathy)과 같은 방법을 첫 번째 메커니즘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대상이라면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반온정주의를 공리(axiom)로 하는 로빈스의 사회·경제 시스템에선 소비자의 선택이 욕구에 대한 직접적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소비 대안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를 통해 민주적 “총선거(general election)”(p. 193)를 치를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소비 대안들과 수많은 소비자가 있는 상황에서 시시각각 (문자 그대로) 총선거를 치른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37) 이후 영국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자들의 논의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권위자가 되고, 경제학자로서의 활동 전반을 통해 그들의 논의를 계승·발전하고자 했던 로빈스(O'Brien, 1988a, pp. 114-5, 118-9)는 영국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자들에게 경제활동의 목적은 단연코 소비였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Robbins, 1952, pp. 7-11).

38) 로빈스는 반온정주의를 영국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에서 발견되는 자유주의의 특징으로 간주한다(Robbins, 1952, pp. 13, 184).

필요한 건 실현 가능하며 민주적인 소비자 욕구 포착 메커니즘일 텐데, 시장이 바로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게 로빈스의 주장이다. 화폐를 보유한 소비자는 시장에서 서의 호가(bidding)라는 행위를 통해 “개인적 가치매김”(p.193)을 표출하며, 그런 호가들을 시장이 처리·가공한 후 생성되는 시장가격은 소비자 욕구의 훌륭한 집계치, 즉 타당성을 갖춘 “사회적 가치매김의 척도”(p.193)라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들의 욕구 포착 메커니즘으로 시장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선, 로빈스도 잘 알고 있던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소비자의 시장 호가는 소득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일인일표(一人一票) 원칙과 어긋나는 비민주성이 시장에 내재되어 있다(p.193). 둘째, (첫째 비판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해도)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향유 역량”(p.193)을 갖추고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호가를 통해 형성된 시장가격이 사회적 가치매김의 적절한 척도가 아닐 수 있다(p.193).

두 번째 비판에 대한 직접적 논의가 *EPIO*에는 없다. 하지만 1935년에 출간된 *NSES* 2판에서 로빈스는 이미, 소비자들의 향유 역량 동등성은 민주 사회에선 당연 시되는 전제임을 지적했다(Robbins, 2019[1935], pp. 231-2). 가치판단이 담긴 이 전제는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선 채택 불가이나, 정치경제에서도 그런 것은 아니다. 정치경제에 속하는 *EPIO*에서 민주주의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두 번째 비판에 로빈스가 명시적 대응을 하지 않은 건 급소를 찌르는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첫 번째 비판에 대해 로빈스는, “소득분포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시장이 지금까지 제안된 바 있는 그 어떤 선호 포착 수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다”(Robbins, 1937, p. 193, 강조는 원문에 있는 것)며 바로 응수한다. *EPIO*에서 로빈스는 소득불평등 문제가 자유주의에 내재된 중요한 문제임을 인정한다(p. 262).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국제적 경쟁의 활성화(p. 264)나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 조세 시스템”(p. 264)을 활용해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노력 후에도 여전히 소득불평등이 남는다고 해서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pp. 265-6), “불평등을 감내하는 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통한] 빈곤 경감을 위해 치러야 하는 작은 대가임이 분명하다”(p. 266)며 선을 긋는다. 소득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동반되는 한, 시장은 “사적 소비 영역과 관련해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이른바, 부단한 국민투표(perpetual referendum)를 가능하

게”(pp. 193-4) 해줄 뿐만 아니라 특이하다는 이유로 특정 욕구에 따르는 선택을 배제하는 법도 없는(p. 193), 아주 훌륭한 소비자 욕구 포착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확인되듯) 로빈스는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을 투표에 비유하면서 시장 가격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더 나은 것을 찾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소비자 욕구의 집계치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런 비유를 로빈스가 *EPIO*에서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다. 1934년에 같은 비유를 사용한 바 있는데(Robbins, 1934, pp. 148-150), 거기서 로빈스는 자신의 논의가 미제스의 책 『사회주의』(*Die Gemeinwirtschaft*)에서 이미 이루어진 논의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다.<sup>39)</sup> 그 책에서 미제스는 자신이 말하는 “경제 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Mises, 1951[1932], p. 11)는 자본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소비자 민주주의(consumers’ democracy)”(p. 11)임을 밝힌다. 미제스에 따르면, 소비자 민주주의에선 생산수단의 사용과 처분의 권한이 기업가·자본가에게 있는데, 이 권한은 “시장에서 매일 행해지는 소비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획득될 수 있을 뿐”(p. 11)이다. 이 소비자 민주주의에는 “투표권에 있어서의 평등이 없음”(p. 11)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의한 민주주의는 아니다. 왜냐하면 투표권에 있어서의 불평등 자체가 투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에 더욱 적절히 반응해 더욱 많은 표를 얻은 생산자만이 더욱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소비자로서) 더 많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정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미제스의 판단이다(p. 11).

적절히 작동하는 생산요소시장을 논의에 도입한 후 미제스는 모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한 자신의 경제 민주주의인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소비자 민주주의가 부정의한 민주주의는 아님을 주장한 것인데, 로빈스도 (곧 확인하게 되듯) 생산요소시장을 논의에 끌어들인다. 하지만 로빈스는 그 후에도 소득불평등이 시정되어야 할 문제임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 따라서 로빈스를 미제스의 복사본으로 간주해선 곤란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두 경제학자의 견해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인데, 그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a) 사회·경제 시스템의 작동 방향 결정에 정당성

39) 로빈스는 미제스의 『사회주의』를 1923년에 읽었으며 깊은 인상을 받아 곧 영어 번역에 착수한다(Howson, 2011, p. 135). 번역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후에 공동 작업으로 전환된다. 그 공동 작업을 통해서도 번역은 완성되지 않았고, 공동 작업의 결과물은 1936년에 출간된 영어판 번역자(Jacques Kahane)의 번역을 돕는데 쓰이게 된다(p. 147).

을 부여해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소비자뿐이며; (b)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은 민주적 투표권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미제스와) 로빈스의 사회·경제 시스템에서 주권(sovcreignty)은 소비자에게 있고, 소비자의 시장 호가는 (민주적 시스템에서의) 주권행사다.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은 로빈스의 사회·경제 시스템 개념화를 이해함에 있어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 개념이며,<sup>40)</sup> (뒤에서 확인 가능하듯) 로빈스의 신자유주의 비전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한다.

로빈스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두 가지 메커니즘 중 첫 번째 것은 적절히 작동하는 소비재시장이며, 두 번째 메커니즘은 시장가격으로 표시되는 생산물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생산요소를 생산 과정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그런 배치가 가능하려면 각 생산물 생산에 수반되는 기회비용 계산이 가능하고, 그 계산을 통해 어떤 생산요소도 현재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생산물 가치가 증가하는 일이 없다는 점이 보장되어야 한다(pp. 194-5, 205).

생산요소, 생산물, 생산방식 각각의 개수가 적다면 생산에 대한 사회적 계획을 피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기회비용 계산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 각각의 개수가 어느 한도를 넘게 되면 직접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p. 198). 필요하게 되는 것은 “비인격적(impersonal) [기회]비용 계산의 방법”(p. 198)인데, 생산요소시장이 존재하고 거기서 “경쟁적 호가(competitive bidding)”(p. 203)를 통해 생산요소가격이 형성되어 생산요소의 생산에 대한 기여정도가 시장가치로 표현된다면, 사회적 계획에 필요한 두 번째 메커니즘의 존재가 현실화되는 것이다(p. 199).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a) 사회·경제 시스템의 목적 또는 존재 이유는 진

40) 소비자주권에 대한 연구(Persky, 1993; Olsen, 2019; Desmarais-Tremblay, 2020)는 다음을 알려 준다: (a) 정식 명명은 허트(William Harold Hutt)에 의해 1936년(Hutt, 1990(1936), 16장), 즉 로빈스의 제네바 강의와 *EPIO* 출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b) 하이에크도 1935년에 출간된 글(Hayek, 1935, p. 214)에서 이 개념을 사용한 바 있고; (c) 당시에 하이에크는 LSE에 교수로 있었는데, 로빈스와 하이에크는 공히 미제스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으며, 허트와 로빈스는 LSE에서 같이 학부생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던 사이였고; (d) 로빈스는 허트의 1936년 책에 대한 자신의 호의적 평가를 판촉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Olsen, 2019, p. 59). LSE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소비자주권은 당연한 것으로 공유되던 개념이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이 다루는 맥락과 긴밀히 연결된, 소비자주권과 관련되는 논의는 Slobodian(2018, pp. 118-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한 주권자인 소비자를 가장 이롭게 하는 데에 있으며—소비자주권—이를 위해선 (b) 적절히 작동하는 소비재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이 존재해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사회·경제 시스템의 구축과 유지를 위한) 계획이 대상으로 할 영역·범위

이런 로빈스의 견해는 경제학자들에게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다른 경제학자들로부터 로빈스를 차별화시켜 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로빈스가 (지금 시점에서 보기에) 얼마나 ‘전형적인’ 경제학자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케인스와의 정면충돌 당시에 로빈스 이외의 (케인스의 경제학자 위원회) 위원들이 취한 자세를 보면, 로빈스의 차별성이 드러난다. 로빈스는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제자유주의로부터 한 치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로빈스의 차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영토 지배권을 독점하는 민족국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와 같은 반자유주의적 수단을 동원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로막는 것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적극 권장할 준비가 되어 있던 당시의 여러 다른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로빈스는 국제자유주의 또는 세계주의적 자유주의(international 또는 cosmopolitan liberalism)를 금과옥조로 삼아 비타협적으로 고수한다. 계획을 통해 이롭게 해야 할 주권자로서의 소비자 집단에는 자국 소비자만 들어가는 것도, (자국 소비자와) 일부 우방국 소비자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전 세계 모든 소비자가 들어간다.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과 유지를 위한 로빈스의 계획에서의 소비자 주권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 걸쳐 편재(遍在)해야 한다. 로빈스의 입장에 따르면 말이다.

따라서 (전 세계가 아닌) 보다 좁은 영역·범위를 대상으로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려는 계획들에 대해 로빈스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EPIO*의 1부(2-4장)와 2부(5-7장)는 그런 계획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sup>41)</sup> 거기서의 비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외양을

41) 구체적으로 *EPIO*에는 (a) 하나의 민족국가에 의한 무역, 투자, 외환, 이민에 대한 통제와 국유화 움직임에 대한 비판(2-3장); (b) 몇 개의 민족국가 생산자들 간의 관매협정과 생산협정에 대한 비판(5-6장); (c) 몇 개의 민족국가 간의 관세동맹에 대한 비판(5장); (d) 몇 개의 민족국가들 간에 인위적으로 임금률 또는 노동시간을 같게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7장) 등이

띠고 있지만 실상 다음과 같은 비판의 변주들일 뿐이다: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대상 영역·범위가 전 세계가 아니라면 국제자유주의 입장에선 주권을 박탈당한 소비자를 한 명 이상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그 계획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며 소비자 집단 전체를 이롭게 해주는 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이어질 수 없고 (따라서) 열등한 계획이다.<sup>42)</sup>

### 3.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경제 시스템 건설·유지를 위한) 사회적 계획에서 요구되는 강제력의 속성, 그리고 그 강제력 실현을 위한 권위체의 골격

바람직한 계획의 목록에는 이제, 전 세계 소비자들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계획들만 남는다. 앞서 이루어진 두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 내용을 전 세계라는 영역·범위에 대해 적용하면 목록에 있을 수 있는 계획에는 어떤 면모가 있어야 할지 자명하다. 전 세계에 걸친 소비재시장과 생산요소시장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환경을 논의하기 전에 로빈스는, 생산요소에 대한 소유권을 중앙계획당국이 독점하고 있어 그에 대한 배분이 (시장이 아닌) 중앙계획당국이라는 권위체의 명령에 좌우되는 곳—국제공산주의(international communism)—에선 사회적 계획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한다(*EPIO* 8장). 사회주의 계산논쟁(socialist calculation debate)에서 반(反)사회주의를 외쳤던 경제학자답게(Lavoie, 1985, 6장) 로빈스는, 생산요소를 중앙계획당국이 소유·통제한다면 생산요소시장이 있을 수 없고 생산요소 가격도 있을 수 없으므로, 생산요소에 대한 효율적 배분 여부를 알 도리가 없어 제대로 된 사회적 계획이 불가능함을 강조한다(Robbins, 1937, pp. 199-200). 또한 생산요소 관리·경영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

담겨 있다.

42) 이 부분(*EPIO* 1부와 2부)에서 로빈스의 국제자유주의에 대한 비타협적 옹호가 잘 드러난 예로는 관세동맹과 관련된 다음 주장을 들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에스키모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사람들을 잘 달래서, 에스키모들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생산품들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을 하는 관세동맹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보자.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이건 국제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이 관세동맹은 에스키모까지를 포함하는 동맹보다는 열등하다. 해로움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유일한 관세동맹은 우리의 소비 대상이 될 수 없는 달나라의 생산물에 맞선 관세동맹뿐이다”(p. 122).

게 하는 “허구적(fictitious)”(p. 211) “유사경쟁(pseudo-competition)”(p. xiv)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반론에 대해선, 그 관리·경영자들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생산활동에 수반하는 궁극적 위험은 그들이 아닌 사회 전체가 지게 되며(p. 209), 이런 상황에서 채택할 수밖에 없는 관료주의적 경영으로 인해 시장 경쟁의 결과에 필적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p. 209-211).<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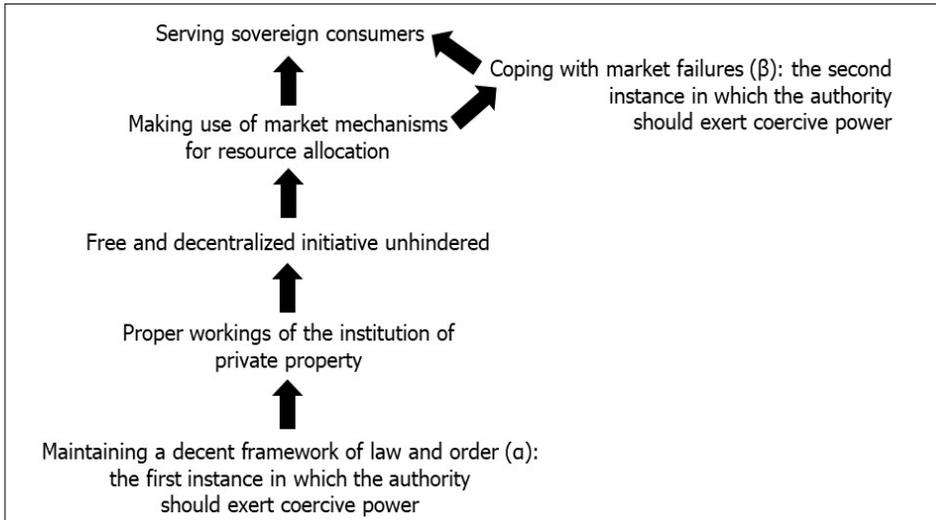
바람직한 계획의 목록에서 국제공산주의를 지운 로빈스는, (국제공산주의의 실패에서 배울 수 있듯) 생산요소시장을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선, 분권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주적 기획과 실천이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사유재산제도라는 배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p. 222). 생산요소에 대한 소유권과 그 사용으로부터 생겨나는 소득에 대한 소유권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생산요소시장에서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유인(incentive)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생산을 조직화하는 원리로서의 시장”(p. 223)은 아무 곳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제도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추가로 로빈스는 그 제도적 뒷받침(사유재산제도)은 “법과 질서의 구조틀(framework of law and order)”(p. 226)이 튼튼하게 확립된 곳에서만 가능하다고 확인한다. 결국 로빈스가 그리는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에선 튼튼한 법과 질서의 구조틀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 중요성을 갖는데, 권위체의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곳이 바로 여기다(pp. 240-1). 그런데 여기가 권위체의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유일한 곳은 아닌데, 왜냐하면 주권자인 소비자를 (가장) 이롭게 하는 것이 시장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은 경우, 즉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권위체의 강제력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sup>44)</sup> 이상의 논의는 <Figure 1>과 같이 정

43) *EPIO* 8장에서 로빈스는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이 같아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득에서의 평등을 추구하면 진정한 주권자인 소비자들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고, (생산요소시장을 통해) 소득이 생산성을 반영하도록 만들면 평등주의가 깨지므로 국제공산주의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한다(pp. 211-5). 또한 국제공산주의에서도 자본축적은 필요한데 중앙계획당국이 저축(과 투자)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역적, 부문적 이해갈등은 첨예해질 것이며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민주적 운영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pp. 215-20). *EPIO* 8장 끝부분에서 로빈스는 국제공산주의는 독재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94번의 마지막 행을 인용한다: “썩어가는 백합은 잡초보다 훨씬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p. 220).

44) 로빈스는 (a) 전염병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같이 권위체를 통해 집단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대책 마련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p. 230), (b) 통신, 철도, 운하 서비스

리될 수 있다.<sup>45)</sup>

〈Figure 1〉 Robbins' liberal social plan



그런데 로빈스가 그리는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에서 주권은 전 세계 소비자에게 있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전 세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Figure 1〉과 같이 정리되는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은 전 세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그런 계획에서의 권위체는 전 세계 차원에서의 강제력을  $\alpha$ 와  $\beta$ 에 있어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sup>46)</sup>  $\alpha$ 와  $\beta$ 에 있어서의 강제력 발휘가 민족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자유주의적인(국제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줄 구체적 방안이 존재할까?

로빈스의 신자유주의 비전의 핵심과 직결되는 게 바로 이 문제인데, 그는 제1차

제공도 권위체의 행위를 필요로 함을 지적한다(pp. 231-2).

45) 로빈스는 중앙계획당국의 통제와 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Figure 1〉과 같이 설명될 수 있는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는 관점을 배격한다. 로빈스에겐 목적을 위해 수단을 잘 조직화하려는 모든 노력이 계획이다(p. 224).

46) 계획에 있어 어떤 성격의 강제력이 인정될 것인지는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앞서 제Ⅲ절 1항 초반부에서 지적하였다. 로빈스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강제력의 성격은 이 부분에서 분명해진다.

세계대전 이전의 자유주의인 고전적 자유주의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로빈스 자신이 제시하는 국제자유주의 계획은 이 문제에 대한 정면돌파 시도의 결과물이며 그의 신자유주의적 비전의 독특한 면모도 이 정면돌파(의 결과물)에서 발견된다. 이제 그의 비판과 정면돌파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자.

(1) 로빈스가 파악하는, 고전적 자유주의 그리고 거기에 담긴 문제점

로빈스에 따르면,

정부가 어떤 기능도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유주의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그냥 놔두면 자기이익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공적 편익 창출에 공헌하게 된다는 순진한 믿음이 자유주의 사회철학의 토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런 미신에 근거해 있다고들 하는 시스템이므로 사람들은, 부자연스런 일이 아니게도, 자유주의에 대해 점검도 해보지 않고 욱부터 한다. (p. 225)

자유주의에 대한 통념 그리고 그 통념에 근거한 행위들과 거리를 두는 로빈스는, “고전적 자유주의의(classical liberal) 관점이 무언지를 판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 그 기초를 놓은 흄([David] Hume), 스미스(Adam Smith) 그리고 벤담([Jeremy] Bentham)의 원전을 읽는 것”(p. 330)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sup>47)</sup> 영국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수(精髓)를 보는 로빈스는, 흄, 스미스, 벤담과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정부를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말은 기괴한 중상모략”(p. 225)이며, 그들이 “사회에 대한 무정부주의적 철학의 단순하고 순진한 전제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 이념 선전을 위한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pp. 225-6, 강조는 원문에 있는 것)며 선을 긋는다. ‘제대로 된’ 세련된 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자유주의 질서는 사회적 계획을 필요로 하며, 그 사회적 계획은 정부의 의식적 노력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므로, 결국 자유주의 질서는 건설과 관리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를 무정부주의(anarchism)의 변종으로 보는 건 심각한 오류라는 게 로빈스의

47) 로빈스는 공리(功利)주의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이에서 불연속성이 아닌 연속성을 본다 (Robbins, 1952, pp. 1-67).

기본 관점이다.<sup>48)</sup>

물론 이런 오류가 널리 퍼져있는 게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는 건 아님을 로빈스는 인정한다. 그에 따르면, 영국 고전학과 정치경제학 저작 중에는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둔 논의 전개를 위해 “시장 그 자체를 당연시”(p. 226) 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가능케 하는 법과 질서의 구조들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p. 226) 것들이 분명히 있다. 게다가 영국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의 분석을 “대중이 소비할 수 있게 간단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정치인들에 의해”(p. 226) 고전적 자유주의는 오해와 왜곡의 대상이 되었다는 게 로빈스의 판단이다.

하지만 그런 ‘속류’가 아닌 세련된 고전적 자유주의를 염두에 둔다면, 영국 고전학과 정치경제학자들이 염두에 둔 “자유주의적 협동의 계획(liberal plan of co-operation)에서 통치와 통치체가 매우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오해”(p. 226)임이 분명하며, “정부(통치)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주의 사회의 특징적 제도들을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p. 227)을 로빈스는 강조한다. 더 나아가 그는, “강제력으로 무장한 권위체”(p. 227)가 튼튼한 법과 질서의 구조들을 세우고 관리하여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고 사유재산제가 잘 작동하여 분권화 상태에서 사적으로 주도되는 생산활동에 대해 “제도라는 구조들을 통한 적절한 한도 내에서의 제약이 가해져야”(p. 227), 시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이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달리 말해, 속류가 아닌 세련된 고전적 자유주의에는 <Figure 1>과 같이 정리되는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의 모든 면모가 담겨 있다는 것이 로빈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흄, 스미스, 벤담을 다시 읽어 고전적 자유주의를 부활시키기만 하면 충분한 걸까? 로빈스는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고전적 자유주의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로빈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48) 국가가 할 일은 사적 개인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케인스의 견해를, 전체 사회를 위해서는 중요하나 이윤을 가져다주지 않으므로 “개인이나 개인들의 집단이 수립하고 유지하는 게 결코 가능하지 않은 특정 공공 사업과 공공 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할 의무”가 “주권체((t)he sovereign)”(p. 226)에 있다는 스미스의 견해와 비교해보면 전자에 새로운 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로빈스는 주장한다(pp. 225-6; cf. 김광수, 2020, p. 19, 각주 14). 고전적 자유주의에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로빈스는 케인스의 짧은 글(Keynes, 1927) 일부와 스미스의 『국부론』 일부를 병치해 비교한 것인데, EPIO에서 로빈스는 케인스를 비판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서 우린 19세기 자유주의의 주된 결함 중 하나를 포착할 수 있다. 상이한 민족국가 영역 내에 사는 사람들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알아차렸던 것은 19세기 사람들(자유주의자들)의 위대한 업적이다. 하지만 이런 조화의 달성이 국제 안전의 구조를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건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경제적·정치적 전쟁이 소모적이고 쓸데없다는 걸 보여주지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각 민족국가가 자유주의적 통치에 적절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에만 전념한다면, 국제 분쟁이 생길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 초국가적 권위체(super-national authority)의 필요성이 생겨날 가능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p. 240)

하지만 이견 중대한 오류였다. 그들이 재산 제도와 시장을 통해 확립된다고 생각한 이익의 조화는, 이미 그들이 보였듯이,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장치를 필요로 했다. 민족국가의 영역 *내부*에는 그러한 장치가, 아무리 불완전하게라도 존재했던 반면, 민족국가의 영역 *사이*에는 그 어떤 장치도 존재하지 않았다. 민족국가 영역 내부(와 관련된 논의)에서 그들은, 상이한 개인들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제약들을 만들어 제공하는 국가의 강제력(coercive power of the state)에 의존했다. [하지만] 민족국가 영역들 사이(에서 생기는 일과 관련되는 논의)에서 그들은 공동의 이익과 폭력의 무용성에 대한 논증에만 신경을 썼다. 여기서 그들의 사고방식은, 말하자면 암묵적으로, 자유주의가 아닌 무정부주의로 이동했다. 하지만 무정부주의적 입장은 옹호 불가한 것이다. ... 우리가 민족국가 내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 그런 논증에만 의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런 논증에 의존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 (pp. 240-1, 강조는 원문에 있는 것)

고전적 자유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로빈스의 진단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모든 시장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주권자인 소비자가 만족스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민족국가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 효율적 생산과 자유로운 교환(무역)을 방해하는 것들을 민족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 억누르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질서 유지가 불가능해지면, 분권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주적 기획과 실천의 자유로운 추진이 불가능해져 역동적인 시장 경제가 작동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민족국가가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위체임을 당연하게 여기고 <Figure 1>에 요약된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을 민족국가 내에서 추진하고자 했

다.

하지만 로빈스가 보기에,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동일한 계획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추진되지 않는다면 민족국가 내에서의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드러내어 명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즉, 국제관계를 다룸에 있어서는 무정부주의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국제관계를 완벽한 자생적(문자 그대로의 의미인 ‘저절로 생겨나는’) 질서의 장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계획의 대상에서 제외하는—빠아픈 실책을 저질렀다. 강제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법과 질서의 구조들이 민족국가 내에 마련되는 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로빈스는 생각한다. 초국가적 국제 권위체가 만들어져야 하며, 민족국가들 간의 관계는 반드시 그 초국가적 국제 권위체 수준에서 건설·관리되는 법과 질서의 구조들이라는 제약 내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민족국가들은 무정부적 투쟁에서 벗어나 전쟁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이 실현 가능해지며, 또 그래야만 민족국가 내에서의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어, 진정한 주권자인 세계 소비자들을 가능한 이롭게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로빈스는 판단한다.

(2) 로빈스의 신자유주의 비전이 담긴 국제자유주의 계획: 국제 연방제를 통한 정치적 혁명

한 마디로 “억제의 메커니즘”(p. 242)이 민족국가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즉 민족국가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메커니즘이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로빈스의 신자유주의 비전의 핵심에 존재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도 *EPIO*에서 찾을 수 있다:

주권 국가들의 단순한 제휴(associations)로는 [억제의] 효과가 생겨날 수 없다는 게 아주 자명해지고 있다. 연합(confederation)—국가연합(*Staatenbund*)—이 상당한 성공을 거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연합이 안고 있는 약점은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분명해졌다. 상이한 국가들이 주권을 유지하는 한, 국가에 대한 명령

은 궁극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군사적 동맹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 연합 형태의 정부(confederal form of government)에 반대하여 미국 헌법을 기초한 이들이 주장한 모든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 우리 시대 국제연맹의 역사에 의해 다시금 분명해졌다. 49) ... 위협의 제거는 민족국가 정부의 주권 포기과 전쟁을 일으킬 권리 포기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pp. 242-4)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배경을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을 통해 건설·유지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로빈스는, 여기서 분명해지듯, 민족국가들이 오롯이 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협력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한참 더 나아가 민족국가들로 하여금 주권을—또는 (이후에 나오듯) 주권의 일부를—내려놓도록 하여 전쟁이라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로 만들어주는 구조들을 의식적·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로빈스는 자신의 비전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민족국가가 국제 권위체(international authority)에 특정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와 힘을 포기시켜야 한다. 하지만 민족국가가 독립된 통치의 권리 전부를 포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제 권위체의 권리에도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연합(alliance)도 아니고 완전한 통일(complete unification)도 아닌 연방(Federation), 즉 국가연합(*Staatenbund*)도 아니고 통일국가(*Einheitsstaat*)도 아닌 국가연방(*Bundesstaat*)이 필수다. (p. 245)

초국가적 국제 권위체가 부재하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주권자인 세계 소비자들을

49)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난 국제연맹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이 주권을 유지하는 국가들끼리의 연합(confederation)의 무의미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로빈스가 한 말이다. 로빈스를 중심으로 하는 근(近)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본 논문에서 국제연맹의 다양하고 복잡한 면모를 다룰 수는 없는데, 그런 면모들에 대한 논의는 Pauly(1996), Clavin(2013), Pedersen(2015)에서 찾아볼 수 있다. *EPIO*를 포함하는 초기 신자유주의 작업이 등장한 맥락과 국제연맹을 연결하는 논의는 Slobodian(2018, 1-3장)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반복하지 않기로 한다. 연방체가 아닌 연합체였던 국제연맹의 무기력함에 대한 로빈스의 비판적 입장은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분명해졌으며(Howson, 2011, pp. 294-5), *EPIO*보다 2년 후에 출간된 책에서 로빈스는 국제연맹을 만든 이들은 “초국가적 권위체(supernational authority)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는 옳았으나”(Robbins, 1939, p. 105), “독립적인 민족국가의 주권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초국가적 권위체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p. 105) “오류”(p. 105)를 범했다며 강하게 비판한다.

가능한 이롭게 하기 위한, 전 세계 차원에서의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로빈스는 “정치적 혁명 (political revolution)” (p. 245) 을 통해 “세계 정체 (world polity)” (p. 239) 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런 혁명을 통해 만들어지는 초국가적 국제 권위체는 (전 세계적 차원의 시장에서의 효율적 자원배분 실현에 필요한) 강제력을 개별 민족국가들에 대해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개별 민족국가들이 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형성하는 느슨한 정체인 국가연합 (*Staatenbund*) 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로빈스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세계를 마치 하나의 민족국가 통치하듯 다룰 수 있는 초국가적 국제 권위체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전세계를 아우르는 통일국가 (*Einheitsstaat*) 가 만들어진다면, (개별 민족국가들을 상대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이해질 것이나 “거대한 리바이어던 (great Leviathan)” (p. 244) 이 탄생해 정당하지 않은 강제력이 (일부) 민족국가들에게 행사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1930년대와 같이] 독립된 주권체 [로 구성되는 국제사회] 가 대혼란이라면, 제한받지 않는 [세계] 단일국가는 종말일지 모른다” (p. 244) 고 판단하는 로빈스는, 초국가적 국제 권위체가 통일국가의 형태를 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확신한다.

초국가적 국제 권위체의 이상적 형태로 로빈스가 제시하는 것은 연방 (federation) 이다.<sup>50)</sup> 즉, 정치적 혁명을 통해 개별 민족국가들의 주권 일부를 연방 권위체로 이양시켜, 국가연방 (*Bundesstaat*) 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sup>51)</sup> 로빈스는 <Figure 1>의  $\alpha$  와 관련되는 주권을 개별 민족국가가 보유하고선 절대 안 되며, 국제 연방 권

50) 로빈스가 미국의 연방주의를 참고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pp. 242-6; Robbins, 1971a, p. 161). 로빈스는 미국 헌법 제정에 큰 공헌을 한 해밀턴 (Alexander Hamilton) 의 글을 길게 인용하기도 하는데 (Robbins, 1937, pp. 242-4), 미국의 연방주의가 완전무결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조정하고, 역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적 협동을 위한 평화와 내부적 자유의 영역을 창출했다는 것은 사실” (p. 246) 이라고 평가한다.

51) 로빈스가 민족국가의 주권을 너무 가볍게 다룬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사회·경제 시스템 개념화에서 진정한 주권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있으므로 민족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불가 개념이라는 점을 이 지점에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의 개념화 내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로빈스에게 민족국가란 “세상에 대한 우연한 정치적 구획짓기” (p. 104) 의 결과일 뿐이며, 민족국가의 주권은 “주권의 소재지가 역사의 우연에 의해 나누어진” (p. 240) 결과일 뿐이다. 진정한 주권자 (세계의 소비자 전체) 는 주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이버 주권자 (민족국가) 가 그것을 휘두르고 있어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고 (pp. 104-5) 비참함과 가난은 계속되고 있다고 로빈스는 한탄한다 (p. 240).

위체(국가연방)에 해당 주권을 집중시켜 <Figure 1>의  $\alpha$ 와 관련되는 일은 모두 이 국제 연방 권위체가 전 세계 차원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 세계 차원에서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가능케 하는) 전 세계 차원의 시장이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잘 작동하기 위한 근본 토대를 닦고 관리하는 일은 국제 연방 권위체가 맡아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로빈스는, 전 세계 차원에서의 교역, 투자, 이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규제의 구조틀(*framework of legal regulation*)” (p. 247) 을 국제 연방 차원에서 만들고 관리하여 효율적 국제분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며, 설령 특정 민족국가 가 그런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철저히 국제 연방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게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pp. 247-9). 또한 그는, 민족국가 간의 거래·결재가 민족국가 내의 거래·결재와 질적으로 달라 무역이 축소되고 세계 차원에서의 시장도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폐·금융과 관련되는 법과 제도는 반드시 연방 차원에서 만들고 관리하여 (pp. 299-300) 화폐·금융에 있어서의 민족주의를 철저히 몰아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국제통화가 없다면 국제경제는 허물어짐” (p. 292) 을 피할 수 없으므로, 국제 연방 내의 모든 지역—즉 모든 민족국가—에서 단일한 국제통화가 사용될 수 있게 만들고 지속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로빈스에 따르면, 이런 근원적 중요성을 갖는 작업은 국제 연방 권위체가 담당해야 한다(10장).<sup>52)</sup> 전 세계 차원에서의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해서 말이다.<sup>53)</sup>

물론 국제 연방 권위체가 (전 세계 차원의 시장에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강제력을 발휘해 수행할 임무, 즉 <Figure 1>의  $\alpha$ 에 해당하는 일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여부, 그리고 혹시라도 개별 민족국가들에게 불필요한 강제력 행사를 하는지

52) 로빈스는 “경제적 민족주의가 취할 수 있는 모습 중 통화민족주의(*monetary nationalism*)가 최악” (p. 290) 이라고 단언하며, 개별 민족국가가 화폐·금융에 있어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어서는 결코 안 되며 초국가적 국제 권위체(국가연방)로 해당 주권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빈스의 제네바 국제학대학원 강연으로부터 2년이 흐른 시점, 즉 *EPIO*가 출간된 1937년에 하이에크는 같은 곳에서 강연을 했고, 그 강연 내용은 같은 해에 바로 책으로 출간된다 (Hayek, 1989[1937]). *EPIO*의 10장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초기 신자유주의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기도 했다(김승우, 2021).

53) 각주 32에서 지적했듯이 로빈스는 자유무역을 벗어날 수 없는 제약으로 만들어주는 ‘게임의 법칙’이 강제되는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유지를 계획한 것이며, 그런 계획에서의 대의명분을 소비자주권에 둔 것이다.

여부 등에 대한 (국제 연방을 구성하는) 개별 민족국가들의 감시와 비판이 가능하도록 국제 연방이 설계되어야 함을 로빈스는 강조한다. (앞선 인용문에도 나와 있듯이) 국제 연방 권위체가 무소불위의 정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역시 앞선 인용문에서도 언급되듯이) 민족국가가 통치의 권리 전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로빈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개별 민족국가가 이양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통치의 권리는 무엇일까? 경제학자답게 통치에 있어서도 적절한 분업을 강조하는 로빈스는, 〈Figure 1〉의  $\beta$ 에 해당하는 역할 수행을 위해 개별 민족국가에도 어느 정도의 통치 권한은 남겨져야 함을 인정한다. 〈Figure 1〉의  $\alpha$ 에 해당하는 역할 수행에는 근원적 중요성이 존재해 유연성의 발휘가 불필요하므로, 전 세계 차원에서의 최고 통치기구인 국제 연방 권위체가 해당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자유주의 질서의 기초를 닦고 관리하는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하며 강제력 발휘가 필요한) 〈Figure 1〉의  $\beta$ 에 해당하는 일—예를 들어, 빈곤 구제와 교육(p. 254)—은 관련 사안의 특성을 감안해 개별 민족국가의 정부 또는 보다 하위의 지방 정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54)</sup> 단, 소비자주권을 금과옥조로 삼는 로빈스답게 (특정 민족국가에 현재 살고 있는 이들의 이익이 아닌) 전체 연방 차원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전 세계 차원에서의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개별 민족국가 정부 또는 보다 하위의 지방 정부도 최우선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도록 국제 연방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p. 250).<sup>55)</sup>

54) 민족국가 정부와 그보다 하위의 지방 정부가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일들이 기술변화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로빈스는 열어 둔다(p. 253). 그는 *EPIO*가 큰 윤곽과 기본 원리 제시를 목적으로 하지, 정책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며 *EPIO*의 한계를 인정한다(pp. 229, 246, 248, 269). 세계 차원에서 작동할, 쇠신된 자유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의 뼈대(국제 연방제)를 제시하는 것이 *EPIO*의 목표였지, 이 뼈대에 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일지는 *EPIO*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다.

55) 예를 들어 민족국가 정부는 그 관할권을 벗어날 수 없게 고정되어 있는 (민족국가 정부 소유)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 그 활용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의 시장가치를 가능한 높이는 방향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국제 연방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p. 251-2). 진정한 주권자인 소비자들은 시장에서의 호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매김을 표현하며 그런 표현의 집합적 결과가 시장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해당 고정 자원을 활용해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의 시장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해당 고정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소비자주권의 원칙이 관철된 걸로 볼 수 있다는 생각—민족국가 (또는 그보다 하위의 권위체)도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금과옥조로 삼아 〈Figure 1〉의  $\beta$ 와 관련되는 통치권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로빈스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EPIO* 말미(11장)에서 로빈스는, 케인스의 주장처럼 민족국가들이 자급자족의 방향으로 나아가 교역, 투자, 이민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면 (부존자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생기는) 민족국가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이라는 주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한다(pp. 321-2). 불황과 실업도 문제지만, 자유주의와 멀어지며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1930년대의 유럽은, 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떠났다가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온 로빈스에게는 급발진한 자동차였다. *EPIO*를 마치며 로빈스는 “민족국가로의 분열로 인해 생겨나는 모순들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들을 창출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자유주의 개혁”(p. 327), 즉 신자유주의적 국제 연방제 확립이 전간기에 드러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근본적이며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의 국제 연방제 제안은 제안에 그쳤고 (지금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급발진한 그 자동차는 결국 멈추지 못했다.

#### IV. 끝내며

1937년 당시에 로빈스는 자신의 신자유주의 비전이 담긴 국제 연방제 제안이 “유토피아”(p. 238) 그리기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sup>56)</sup> 제Ⅲ절에서 살펴본 로빈스의 유토피아의 중심에는 소비자주권이 있다. 그가 제안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적 계획은 이 소비자주권을 전 세계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으로 한다. 이 계획이 잘 추진되면 시장의 작동 영역·범위는 매우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 넓어진 곳에는 ‘경제논리’만이 작동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는 초국가적 국제 권위체의 강제력 발휘가 필요하다. 특히나 진정한 주권자(소비자)들로부터 찬탈한 주권이 마치 진정 자신의 것인 듯 행세하고 있는 사이비 주권자(민족국가)들이 힘을 쓰고 있는 곳에서는 이 사이비 주권자들을 압도할 수 있으나 그들 위에 군림하지는 않는 초국가적 국제 권위체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 제Ⅲ절에서 확인했듯 로빈스에 따르면 말이다. 도덕에 호소하며 자유무역 수호를 촉구하는 것—1923년에 케인스가 실천한 것(제Ⅱ절 4항의 인용문 참조)—은 사이비 주권자(민족국가)들이 활개 치는 곳에선 공허한 외침일 뿐임을 1930년대에 몸소 체험한 후 로빈

56) 그는 거의 4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점을 흔쾌히 그리고 자랑스레 인정하기도 했다(Robbins, 1971a, p. 161).

스는, 이 사이버 주권자(민족국가) 들에게, 자유무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구속복(institutional straitjacket)을 입히는 정치적 과정을 그려본 것이다. 이런 지난한 정치적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로빈스의 유토피아는 작동 가능하다. 따라서 아이러니로 느껴질지도 모르는 다음 명제가 성립한다: 만들어진 질서 없이 자생적—문자 그대로의 의미인 ‘저절로 생겨나는’—질서 없고, ‘정치’ 없이 ‘경제’ 없다. 로빈스의 유토피아 그리기에 따르면 말이다. 정치의 영역(imperium)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경제의 영역(dominium)이 확보된 결과인 로빈스의 유토피아는 정치적 과정 없이 실현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로빈스의 유토피아가 ‘유토피아’인지 아니면 ‘디스토피아’인지를 가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로빈스의 비전으로부터 “어리석고 유토피아적인 극단으로 치닫기”(Sally, 1998, p.97)를 보는 대신, 그의 비전에 담긴 유토피아에는 위의 명제—만들어진 질서 없이 자생적 질서 없고, ‘정치’ 없이 ‘경제’ 없다—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할 뿐이다. 정치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또는 만들어지고 있는—제도적 구속복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아쉽게도 본 논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 ■ 참 고 문 헌

1. 김광수, “애덤 스미스의 공공재정 및 조세론에 관한 재조명,” 『경제학연구』, 제68집 제4호, 2020, pp. 5-51.  
(Translated in English) Kim, Kwangsu, “Adam Smith’s Ideas of Public Finance and Taxation Reviewed,”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ol. 68, No. 4, 2020, pp. 5-51.
2. 김명환, 『영국 사회주의의 두 갈래 길』, 한울, 2006.  
(Translated in English) Kim, M. H., *Two Paths Taken by British Socialism*, Paju: Hanul, 2006.
3. \_\_\_\_\_, 『영국의 위기 속에서 나온 민주주의: 길드 사회주의: 노사민 합의의 민주주의(1900-1920년대)』, 혜안, 2009.

- (Translated in English) Kim, M. H., *Democracy out of British Crisis: Guild Socialism: Democracy among Consumers, Producers, and Citizens (1900-1920s)*, Seoul: Hyeon, 2009.
4. 김승우, “금본위제, 민족주의, 그리고 초기 신자유주의 국제통화체제론: F. A. 하이에크의 『통화 민족주의와 국제적 안정』,” 『사충』, 제103호, 2021, pp.143-175.  
(Translated in English) Kim, Seung Woo, “Gold Standard, Nationalism, and the Neoliberal Idea of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F. A. Hayek’s *Monetary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Stability*,” *Sa-Chong*, No. 103, 2021, pp.143-175.
  5. 이근식, 『신자유주의: 하이에크·프리드먼·뷰캐넌』, 기파랑, 2009.  
(Translated in English) Lee, K. S., *Neoliberalism: Hayek, Friedman, Buchanan*, Seoul: Guiparang, 2009.
  6. Backhouse R. E. and S. G. Medema, “Laissez-Faire, Economists and,” pp.3566-3574, in S. N. Durlauf and L. E. Blume (eds.),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Vol. 4, Palgrave Macmillan, 2008.
  7. Beveridge, W. H. (Committee of Economists under the Chairmanship of Sir W. Beveridge), *Tariffs: The Case Examined*, Longmans, Green and Co., 1931
  8. \_\_\_\_\_, *Tariffs: The Case Examined* (2nd ed.), Longmans, Green and Co., 1932.
  9. Birch, K., *A Research Agenda for Neoliberalism*, Edward Elgar, 2017.
  10. Broda, C., N. Limão and D. E. Weinstein, “Optimal Tariffs and Market Power: The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8, No. 5, 2008, pp.2032-2065.
  11. Burgin, A., *The Great Persuasion: Reinventing Free Markets since the Depress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12. Cahill, D., M. Cooper, M. Konings and D. Primrose (eds.), *The SAGE Handbook of Neoliberalism*, Sage, 2018.
  13. Caldwell, B., *Hayek’s Challenge: An Intellectual Biography of F. A. Hayek*,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14. Cammarosano, J. R., *John Maynard Keynes: Free Trader or Protectionist?*, Lexington Books, 2014.
  15. Carr, E. H.,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algrave, 2001(1939).
  16. Clavin, P., *Securing the World Economy: The Reinvention of the League of Nations, 1920-1946*,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7. Desmarais-Tremblay, M., “W. H. Hutt and the Conceptualization of Consumers’ Sovereignty,” *Oxford Economic Papers*, Vol. 72, No. 4, 2020, pp.1050-1071.
  18. Eichengreen, B., “Keynes and Protectio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44, No. 2, 1984, pp.363-373.
  19. \_\_\_\_\_, *Evasive Stability: Essays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Finance, 1919-193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20. \_\_\_\_\_, *Golden Fetters: The Gold Standard and the Great Depression*,

- 1919-1939,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21. Haberler, G., "Review of Tariffs: The Case Examined by Committee of Economists under the Chairmanship of Sir William Beverid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40, No. 6, 1932, pp.828-829.
  22. Harris, J., *William Beveridge: A Biography*, Clarendon, 1977.
  23. Harrod, R. F., *The Life of John Maynard Keynes*, Macmillan, 1951.
  24. Hartwell, R. M., *A History of the Mont Pèlerin Society*, Liberty Fund, 1995.
  25. Hayek, F. A., "The Present State of the Debate", pp.201-43 in his (ed.),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Routledge, 1935.
  26. \_\_\_\_\_, *Monetary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Stability*, A.M. Kelley, 1989[1937].
  27. \_\_\_\_\_, "A Rebirth of Liberalism," *The Freeman*, Vol. 2, No. 22, July 28, 1952, pp.729-731.
  28. Heffernan, M. and B. J. Thorpe, "The Map that Would Save Europe': Clive Morrison-Bell, the Tariff Walls Map, and the Politics of Cartographic Display,"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Vol. 60, 2018, pp.24-40.
  29. Hicks, J. R., and R. G. D. Allen., "A Reconsideration of the Theory of Value. Part I." *Economica*, Vol. 1, No. 1, 1934a, pp.52-76.
  30. \_\_\_\_\_, "A Reconsideration of the Theory of Value. Part II. A Mathematical Theory of Individual Demand Functions," *Economica*, Vol. 1, No. 2, 1934b, pp.196-219.
  31. Howson, S., "Keynes and the LSE Economists,"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Vol. 31, No. 3, 2009, pp.257-280.
  32. \_\_\_\_\_, *Lionel Robbi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33. Howson, S. and D. Winch, *The Economic Advisory Council, 1930-1939: A Study in Economic Advice during Depression and Recove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34. Humphrey, T. M., "Classical and Neoclassical Roots of the Theory of Optimum Tariffs," *Economic Review*, Vol. 73, 1987, pp.17-28.
  35. Hutt, W. H., *Economists and the Public: A Study of Competition and Opinion*, Transaction Publishers, 1990 [1936].
  36. Hülsmann, J. G., *Mises: The Last Knight of Liberalism*, Ludwig von Mises Institute, 2007.
  37. Irwin, D. A., "Retrospectives: Challenges to Free Trad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5, No. 2, 1991, pp.201-208.
  38. \_\_\_\_\_, *Against the Tide: An Intellectual History of Free Trad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39. \_\_\_\_\_, *Trade Policy Disaster: Lessons from the 1930s*, MIT Press, 2012.
  40. Keynes, J. M., "The Underlying Principles," reprinted in E. Johnson (ed.), *Activities 1920-1922: Treaty Revision and Reconstruction*, pp.448-53 in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XV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923].

41. \_\_\_\_\_, *The End of Laissez-Faire*, Leonard & Virginia Woolf, 1927.
42. \_\_\_\_\_, *A Treatise on Money* (Vol. 1): *The Pure Theory of Money in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V,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930].
43. \_\_\_\_\_, "Proposals for a Revenue Tariff," reprinted in *Essays in Persuasion* (with a New Introduction by D. Moggridge), pp.231-38 in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IX,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931].
44. \_\_\_\_\_, "The Means to Prosperity," reprinted in *Essays in Persuasion* (with a New Introduction by D. Moggridge), pp. 335-66 in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IX,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933a].
45. \_\_\_\_\_, "National Self-Sufficiency," reprinted in D. Moggridge (ed.), *Activities 1931-1939: World Crisis and Policies in Britain and America*, pp.233-46 in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XX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933b].
46. \_\_\_\_\_, *Activities 1929-1931: Rethinking Employment and Unemployment Policies*, edited by D. Moggridge,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XX),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47. Krugman, P. R., M. Obstfeld and M. J. Melitz,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 Policy* (11th ed.), Pearson, 2018.
48. Lavoie, D., *Rivalry and Central Planning: The Socialist Calculation Debate Reconsider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49. Lerner, A. P., "Factor Prices and International Trade," *Economica*, Vol. 19, No. 73, 1952, pp.1-15.
50. Markwell, D., *John Maynard Keyn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conomic Paths to War and Pea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51. Maas, H., *Economic Methodology: A Historical Introduction*, Routledge, 2014.
52. Mirowski, P., *Never Let a Serious Crisis Go to Waste: How Neoliberalism Survived the Financial Meltdown*, Verso, 2013.
53. Mirowski, P. and D. Plehwe (eds.), *The Road from Mont Pèlerin: The Making of the Neoliberal Thought Collectiv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54. Mises, L. v., *Socialism: An Economic and Sociological Analysis* (translated by J. Kahane from the 2nd. German Edition), Yale University Press, 1951 [1932].
55. Moggridge, D. E., *Keynes*, Macmillan, 1976.
56. O'Brien, D. P., "Lionel Charles Robbins, 1898-1984," *Economic Journal*, Vol. 98, No. 389, 1988a, pp.104-125.
57. \_\_\_\_\_, *Lionel Robbins*, St. Martin's Press, 1988b.
58. Olsen, N., *The Sovereign Consumer: A New Intellectual History of Neoliberalism*, Palgrave Macmillan, 2019.
59. Opie, R., "Review of *Economic Planning and International Order* by Lionel Robbins," *Economic Journal*, Vol. 47, No. 187, 1937, pp.514-516.
60. Pauly, L. W.,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Foreshadowing of the International

- Monetary Fund,”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no. 201, Princeton University, International Finance Section, 1996, pp.1-47.
61. Pedersen, S., *The Guardians: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Crisis of Empi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62. Persky, J., “Retrospectives: Consumer Sovereign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7, No. 1, 1993, pp.183-91.
  63. Polanyi, K.,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eacon Press, 2001〔1944〕.
  64. Reinhoudt, J. and S. Audier, *The Walter Lippmann Colloquium: The Birth of Neo-Liberalism*, Palgrave Macmillan, 2018.
  65. Ritschel, D., *The Politics of Planning: The Debate on Economic Planning in Britain in the 1930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66. Robbins, L., “The Case for Liberalism,” *The Outlook: A Weekly Review of Politics, Art, Literature, and Finance*, October 25, 1924, p.293.
  67. \_\_\_\_\_, “A Reply to Mr. Keynes,” *New Statesman and Nation*, March 14, 1931, pp.98-100.
  68. \_\_\_\_\_, *The Great Depression*, Macmillan, 1934.
  69. \_\_\_\_\_, *Economic Planning and International Order*, Macmillan, 1937.
  70. \_\_\_\_\_, *The Economic Causes of War*, Jonathan Cape, 1939
  71. \_\_\_\_\_, *The Economic Problem in Peace and War: Some Reflections on Objectives and Mechanisms*, Macmillan, 1947.
  72. \_\_\_\_\_, *The Theory of Economic Policy in English Classical Political Economy*, Macmillan, 1952.
  73. \_\_\_\_\_, *The Economist in the Twentieth Century: and Other Lectures in Political Economy*, Macmillan, 1954.
  74. \_\_\_\_\_, *Robert Torrens and the Evolution of Classical Economics*, Macmillan, 1958.
  75. \_\_\_\_\_, “Hayek on Liberty,” *Economica*, Vol. 28, No. 109, 1961, pp.66-81.
  76. \_\_\_\_\_, *Autobiography of an Economist*, Macmillan, 1971a.
  77. \_\_\_\_\_, *Money, Trad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acmillan, 1971b.
  78. \_\_\_\_\_, “Economics and Political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1, No. 2, 1981, pp.1-10.
  79. \_\_\_\_\_,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이 지닌 속성과 중요성』, 이규상 옮김,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9. (원전: *An Essay on the Nature &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2nd. ed., Macmillan, 1935.)
  80. Rodgers, D., “The Uses and Abuses of ‘Neoliberalism’,” *Dissent*, Vol. 65, No. 1, 2018, pp.78-87.
  81. Sally, R., *Classical Liberalism and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Studies in Theory and Intellectual History*, Routledge, 1998.
  82. Samuelson, P. A.,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qualisation of Factor Prices,” *Economic Journal*, Vol. 58, No. 230, 1948, pp.163-84.

83. \_\_\_\_\_, "International Factor-Price Equalisation Once Again," *Economic Journal*, Vol. 59, No. 234, 1949, pp.181-97.
84. Skidelsky, R., *John Maynard Keynes, 1883-1946: Economist, Philosopher, Statesman*, Penguin Books, 2005.
85. Slobodian, Q., *Globalists: The End of Empire and the Birth of Neoliber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2018.
86. Springer, S., K. Birch and J. MacLeavy (eds.), *The Handbook of Neoliberalism*, Routledge, 2016.
87. Steiner, Y., "The Neoliberals Confront the Trade Unions," in P. Mirowski and D. Plehwe (eds.), 2009, pp.181-203.
88. Trentmann, F., *Free Trade Nation: Commerce, Consumption, and Civil Society in Modern Britai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89. Van Horn, R., P. Mirowski and T. A. Stapleford (eds.), *Building Chicago Economics: New Perspectives on the History of America's Most Powerful Economics Progr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90. Venugopal, R., "Neoliberalism as Concept," *Economy and Society*, Vol. 44, No. 2, 2015, pp.165-187.
91. Wilde, O., "The Relation of Dress to Art. A Note in Black and White on Mr. Whistler's Lecture," pp.17-20 in R. Ellmann (ed.), *The Artist as Critic: Critical Writings of Oscar Wild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1885].
92. Wootton, B., "Review of *Tariffs: The Case Examined* by Sir William Beveridge and Others," *Economic Journal*, Vol. 42, No. 165, 1932, pp.64-66.

## Lionel Robbins Envisaging a Federal Utopia Implementing a Neoliberal Order\*

Kyu Sang Lee\*\*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reconstruct the central argument of *Economic Planning and International Order*, an interwar classic authored by Lionel Robbins with a view to building a neoliberal order, strong enough to sustain free trade an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o this end, this paper also offers a portrayal of the intellectual and social contexts within which his attempt was made to transform classical liberalism, which had been on the wane since the late 19th century, into a new version of liberalism. A discussion of a distinguishing feature of his neoliberal vision closes the paper.

**Key Words:** Lionel Robbins, neoliberalism, federalism

**JEL Classification:** B2, B3, F5

---

*Received: March 4, 2022. Revised: May 23, 2022. Accepted: June 10, 2022.*

\* Previous versions of this article were presented at the 2021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 Conferences (Spring and Fall). I am grateful to Chang-Hwan Jun, Byeong Cheon Lee, Wang Hwi Lee, Hanseok Suh, and Byeong-Ha Yoo for having taken time to answer my queries. Thanks also go to Hyeon-Hyo Ahn, Jung-Kyoo Choi, Hoon Hong, Jaehong Hwang, Myung-Goo Kang, Chul-Hwan Kim, Young-Yong Kim, Namhyung Lee, Sanghoon Lee, Jonghyun Park, and Dong Min Rieu, all of whom provided me with valuable comments on previous versions of this article. I also thank the two anonymous referees and the anonymous advisor for helping me improve the final version of this article.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Ajou University, 206 World cup-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16499, Korea, Phone: +82-31-219-2773, e-mail: kyslee@ajou.ac.kr